연구자료 23-04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남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 무역통상안보, 국제개발협력, 세계지역연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044-414-1114 F. 044-414-1001
www.kiep.go.kr

연 구 자 료
23-04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남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자료 23-04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인 쇄 2023년 11월 3일
발 행 2023년 11월 10일
발행인 이시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504-3 94320
978-89-322-2064-2(세트)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한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제경제학에서 연구되는 내생적 무역정책 형성 이론의 미시적 기초를 활용한다. 나아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가 그들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설명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가 정치경제적 배경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 노동 부국인 필리핀과 태국의 유권자들은 인적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보호무역을 선호한다. 반대로 상대적 자본 부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은 인적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이는 헥셔-올린 모형 기반의 요소부존 접근법이 취하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하지만 요소부존 접근법은 산업부문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장기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문간 노동의 이동이 경직적인 특정 요소 접근법을 감안한 분석을 도입하여, 비교우위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과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간에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 분석 결과, 4개국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특정 요소 접근법의 이론적 예측은 실증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국가별 생산요소 부존과 개인의 인적자본 보유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되는데, 개인이 갖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가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을지 규명하는 것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설문 데이터를 통해 각 유권자들의 총선 정당 선택을 분석한 결과, 필리핀과 태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로 설명되지 않았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투표 행위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호주의 유권자들은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분류되는 일국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은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노동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유권자가 종사하는 국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특정 정당 지지에서 중요한 요인인지를 호주를 제외한 3국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 유권자들의 산업 소속은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에서 각각 자유당, 프아타이당, 국민당에 대한 지지 확률과 관련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통상 기조가 국내 정치경제적 배경을 반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여지가 많은 반면에, 필리핀과 태국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추정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리핀과 태국의 투표행위는 지역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4개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교섭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차례

표 차례

부록 표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무역통상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정책 목표가 고려될 수 있다. 무역 자유화 및 무역 장벽 완화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과 국내 가격 인하를 달성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특정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형성하거나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특정 국가와 인적, 물적 교류를 증대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통상 전략이 활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전범국가나 독재국가에 대해 항의하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역 제재가 시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정치 환경 속에서, 모든 정책은 유권자의 지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힘들다. 무역정책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도의 세계화가 달성되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편입된 지금의 상황에서, 무역정책의 향방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손익은 서로 크게 상이할 수 있다. 개별 유권자들은 본인의 손익에 따라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나아가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많은 국가들의 선거에서 무역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무역정책의 정치 경제(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를 파악하는 것은 각국의 통상전략 입안 배경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 국가간의 통상정책 차이가 어떠한 국가적 특성에 기

인하는지는 국가간 데이터 분석(cross-country analysis)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한 국가의 통상정책 기조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생산 요소 부존과 종사 산업과도 관련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미시적 기초에 관해서도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국가간 비교우위로 인하여 무역의 흐름이 발생하면, 국내 노동자들은 개개인의 요소 부존 및 소속 산업에 따라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기도 하고 무역을 통해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때 대의민주주의를 시행 중인 국가들에서는 중위 투표자(median voter)가 무역을 통해 양의 후생 효과를 얻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중위 투표자가 무역을 통해 음의 후생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무역 장벽 강화의 압박을 받는데, 특히 선거에서 무역이 핵심 논점으로 떠오르면 유력 정당들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에 반응하여 상응한 정책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이번 연구가 다루는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의 통상정책을 이해하는데도 이와 같은 접근법은 크게 도움이 된다. 필리핀과 태국은 통상 개방 기조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수입 경쟁(import competition)에 크게 노출된 유권자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앞으로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정치인들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필리핀은 오랜 수입대체산업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개방은 국내 수입대체산업 종사자들의 후생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왔다. 따라서 필리핀 선거에서 보호무역 담론은 꾸준히 주요 이슈로 자리잡았다.

태국 역시 통상 관련 이슈가 국내 정치에서 꾸준한 주목을 받아왔다. 2011년 선거에서 집권한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은 태국 내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여 연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태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공약으로 일종의 차량 소비세 감면 조치(First Car Buyer Incentive)를 제안하여 실행한 바 있다. 태국은 전반적인 실행관세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세, 통관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도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태국의 추가 개방은 언제든지 다시 중요한 선거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시 무역

정책 관련 이슈가 꾸준히 선거의 핵심 이슈로 자리해왔다. 최근에는 특히 무역 대중의존도 재조정과 관련된 경제안보 이슈가 정당 간에 활발한 논의를 초래했다.

위의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무역정책에 관련된 정치경제를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는 한국의 통상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의 주요 통상 파트너로서 급부상 중인 4개국이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국내정치적 제약을 유권자 단위 미시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기존의 정책연구가 담지 못하던 정치경제적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다. 필리핀과 태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및 투자 시장으로 급성장 중인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진출이 두드러지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에 필리핀과 태국의 통상환경이 갖는 정치적 배경을 다룸을 통해 향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수요에 이번 연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통상 파트너로서, 심화하는 미·중 경쟁 및 신냉전 기류하에 협력 증대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한 국가들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두 국가의 정기적 선거를 기점으로 표면화될 수 있는 통상기조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해를 고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가 선행 연구에 비해 갖는 차별성은 동남아·대양주 4개국 각국에 대한 개별적 분석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여러 국가의 설문 자료들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경향에 초점을 맞추거나 서구 선진국 위주의 분석을 행했다면, 이번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 설문을 각각 분리하여 독립적인 실증 분석을 행한다. 이에 각국의 유권자들을 모집단으로 상정하여 각국의 일반성 및 특수성에 관심을 가진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가 실시하는 실증분석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에 관해서 문헌 분석을 실시한다. 여러 이론적 접근법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실증 분석 결과 정리를 통해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아가 기존의 문헌들을 이해함으로써 이번 연구의 4개국 분석이 가지는 학술적 배경을 논한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이 경제학적 이론에 부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접근법인 요소부존 접근법(factor endowment approach)과 특정 요소 접근법(specific factor approach)에 따라 각 절을 구성했다. 제4장에서는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가 실제 투표 행위와도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선거로 대변되는 각국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논할 수 있게 된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형성 과정과 투표행위에서 보호무역정책 수요의 역할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4개국의 통상정책이 갖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제5장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요약하며 연구의 결론을 내린다.

제2장 보호무역주의 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증거

1.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

한 국가 내의 사회 구성원들이 개방경제하에서 상품교역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어떠한 원리로 무역 혹은 무역정책에 대해 태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그들이 어떻게 무역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연구 담론을 내생적 관세형성 이론(endogenous tariff formation theory), 혹은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endogenous trade policy theory)이라고 부른다. 이 접근법을 활용한 분석에서 연구자들은 각국의 무역정책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각국의 비교우위, 생산 요소의 분포, 그리고 이에 연관된 국내 정치 상황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인식하에 국제 경제를 분석한다. 여기서 국내 정치를 어떻게 모형화하는지에 따라 분석의 초점과 내용이 달라지는데, 가장 잘 알려진 접근법들을 이번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 담론에서 유권자 단위의 미시적 기초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는 Mayer(1984)의 이론적 도출이다. Mayer(1984)의 모형은 헥셔-올린 무역 모형 내의 선거 경쟁 맥락에서, 중위 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를 사용하여 유권자들의 무역정책(관세)에 대한 선호를 집계한다. Mayer는 세계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국가(예: 필리핀, 태국)에서 비교적 개방적인 무역정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논한다. 이는 한 경제 내에서 자본 소유의 다양한 분포(또는 불평등)에서 비롯된다. 필리핀과 태국 같은 노동 부국에서의 중위 투표자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노동 업무에 종사하는 시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 부국의 중위 투표자 입장에서 자유무역은, 노동 부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 집약적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움으로써 노동 소유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호재로 여겨진다. 이에 노동 부국의 중위 투표자는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Mayer(1984)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예: 호주, 뉴질랜드)에서 강도 높은 보호무역정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도출한다. 이와 같은 현상 역시 생산 요소가 국내에서 어떻게 분포되는지에 기인한다. 자본 부국에서도 노동 부국에서와 같이, 중위 투표자는 자본 소유자가 아닌 노동 소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자본 부국에서 자유무역정책은 자본 부국이 비교 열위에 놓인 노동 집약적 산업이 수입 경쟁에 더욱 노출되게끔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중위 투표자는 자유무역에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고,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하는 정당 및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Mayer(1984)를 확장, 발전시킨 최근 모델은 유권자들이 고려하는 경제적 측면에 더하여 이념적·문화적·사회적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의 분포와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를 연관시킨다. 예를 들어 Pástor and Veronesi (2021)는 각 유권자의 효용함수를 당사자의 소비와 사회 구성원들 간 소비 불평등의 함수로 규정한다. 즉 사회 내에서 소비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구성원들이 느끼는 사회 불평등이 결국 개개인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세운다. 저자들은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부유한 나라의 유권자들이 반(反)세계화 정책을 약속하는(높은 무역 장벽과 높은 이민 장벽을 도입하려는) 포퓰리스트를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Grossman and Helpman(2021)은 유권자 단위의 효용 함수에서 출발하여 국가 내의 불평등이 무역 장벽 형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밝혔다. Grossman and Helpman(2021)의 유권자 단위의 효용 함수에는 개인의 소비와 함께 심리적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유권자 본인의 소비와 해당 유권자가 소속된 사회 그룹의 평균 소비 간에

괴리가 클수록 심리적 구성요소는 효용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본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 내에서 자신의 소비 수준이 갖는 상대적 위치가 효용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Mayer(1984)로 대표되는 중위 투표자 정리에 기반한 분석 방법들은 국가와 사회 구성원의 요소 부존을 활용하여 설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요소 부존 접근법(factor endowment framework)이라고 불린다. 이번 연구도 선거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응답자 개개인의 인적 자본 보유량과 보호무역에 관한 태도를 연관 짓는다는 점에서 요소 부존 접근법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헥셔-올린 접근법을 활용한 고전적 접근법과 최신의 접근법은 생산요소의 국내 산업간의 이동(sector mobility within a country)이 가능한 장기(long term)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노동과 자본 두 생산 요소 모두 산업간 경직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와 립진스키 정리가 성립하면, 헥셔-올린 모형을 통해 자유무역에 의한 중위 투표자의 후생 변화를 앞에서와 같이 이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후생효과는 많은 경우 단기에도 관찰 가능하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인식을 모형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앞의 논의는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에는 생산요소가 특정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없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기의 요소 경직성을 감안한 무역 모형을 특정 요소 접근법(specific factor approach)이라고 부른다.

간단한 특정 요소 접근법에서 흔히 쓰이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2국가, 2산업 모형을 고려했을 때 노동은 두 산업간을 단기에도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가능 생산요소(mobile factor)로 간주된다. 다만 두 산업에는 개별 산업에 특화된 생산요소(특정 고정 생산요소, specific factor)가 각각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자본집약적 산업의 생산 기계와 농업의 토지를 각 산업의 특화된 생산요소로 볼 수 있다. 특정 요소 모형하에서 이동 가능 생산요소와 특정 고정 생산요소가 자유무역 및 보호무역으로부터 어떠한 후생효과를 갖는지는 고전적인 이론 분

석 문헌들인 Samuelson(1971), Jones(1971), Mayer(1974)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동 가능 생산요소는 보호무역을 통해 얻는 후생 효과의 방향이 불분명하다. 즉 이동 가능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보호무역 혹은 자유무역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한데, 이는 그들의 무역정책에 따른 실질 소득의 변화가 어떤 재화의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1)] 반면에 특정 고정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무역정책에 따라 분명한 후생 변화를 겪는다. 수출 산업에 고용된 특정 고정 생산요소 보유자들은 자유무역에 의해 양의 후생 효과를 누리는 반면에 보호무역에 의해서는 음의 후생 효과를 누린다. 수입 산업에 고용된 특정 고정 생산요소 보유자들은 반대로 자유무역에 의해 음의 후생 효과를 누리고, 보호무역에 의해서는 양의 후생 효과를 누린다. 따라서 특정 고정 생산요소를 보유한 유권자 및 시민들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수출 산업인지 여부에 따라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를 정하게 된다. 반면 이동 가능 생산요소를 보유한 유권자들은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가 개개인의 효용함수 및 종합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소개한 요소 부존 접근법과 특정 요소 접근법은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장기적 태도와 단기적 태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 소유자는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 두 접근법의 이론적 도출이다. 만약 자본이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에 특화된 특정 고정 생산요소라면, 장기에는 해당 국가의 요소 부존에 의한 비교우위에 따라 자본가들의 태도가 결정된다. 반면에 단기에 자본가들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는 해당 자본가가 수출 부문에서 종사하는지 여부에 의해 설명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두 접근법 모두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

1) 이러한 이동 가능 생산요소 소유자의 무역정책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Hillman(1989) 등의 학자들은 'neo-classical ambiguity'라고 칭하기도 한다.

앞의 접근법들은 개개인의 선호가 선거를 포함한 정치 과정에 의해 집계되어, 중위 투표자의 선호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시도한 접근법들도 경제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었다. 그중 산업 이익 집단의 로비와 집권당의 사회 후생 극대화 및 정권 연장 욕구가 상호작용하여 무역정책을 형성한다고 이해하는 접근법이 가장 잘 알려진 다른 접근법들 중 하나다. Grossman and Helpman(1994)의 연구로 대표되는 'protection for sale' 연구 담론이 이에 해당한다. 집권당의 사회 계획자(social planner)는 정권 연장 및 지지 극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권당의 목표가 반영된 사회 효용을 고려하는데, 집권당이 고려하는 사회 효용 함수에는 각 산업 집단의 정치적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 각 산업 이익 집단도 집권당의 이러한 사회 효용 함수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입 경쟁(import competition)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치적 기여(로비)를 행한다. 이에 해당 국가의 무역 장벽의 수준은 산업 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과 집권당의 사회 후생 함수 극대화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Grossman and Helpman(1994)의 접근법은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정치경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로비가 합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산업의 부흥 여부에 따른 유권자들의 후생 변화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 사회 내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예를 들어, 경제안보에 직결된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식량안보가 중요한 국가에서 농민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은 해당국의 무역정책 형성을 위해 집권당이 항상 귀기울여야 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에서 Grossman and Helpman(1994)의 접근법은 로비가 합법화되지 않은 국가들에도 아주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산업 이익 집단이 무역정책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Grossman and Helpman(1994) 이외에도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Rodrik(1995)은 이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Findlay and Wellisz(1982)로 대표

되는 관세 형성 함수 접근법(tariff-formation function approach), Hillman (1989)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지지 함수 접근법(political support function approach), Magee, Brock, and Young(1989)으로 대표되는 선거운동 기여 접근법(campaign contributions approach)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주된 초점은 개인 단위 선거 설문자료를 통한 실증 분석에 있기 때문에, 산업 이익 집단의 로비를 통한 무역정책 관여 메커니즘은 이번 연구의 실증 분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소개할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에 관한 실증 분석은 이번 연구의 실증 분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요소 부존 모형과 특정 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

내생적 무역정책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후반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연구 담론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론적인 접근법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패널 데이터 및 개인 단위의 설문조사가 발전하면서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먼저 중위 투표자 접근법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실증 분석으로 국가간 요소 부존을 활용한 분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Dutt and Mitra(2002, 2005)를 고려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헥셔-올린 모형에 기반한 중위 투표자 모형에서 국내 불평등이 증가할 때 자본 부국에서는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노동 부국에서는 무역 장벽이 낮아진다. Dutt and Mitra(2002, 2005)는 실증적으로도 이러한 이론적 예측이 맞음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각국의 물질적 자본 보유량과 함께 국내 불평등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지니 계수 등의 불평등 지수를 활용했다. Dutt and Mitra(2005)는 동일 저자들의 2002년 논문의 분석 방법에 집권당의 정치 이념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내

생적 무역정책 담론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확장시켰다.

미시적 기초에 관한 논문은 주로 개인 단위의 선거 설문(election survey)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왔다. Scheve and Slaughter(2001)는 미국의 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Scheve and Slaughter(2001)는 헥셔-올린 정치경제 모형의 문맥 내에서 도출된 개인별 무역정책 선호에 대한 예측을 확인하고, Balistreri(1997)와 Beaulieu(2002)는 캐나다 조사를 사용하여 유사한 실증 분석을 행했다. Mayda and Rodrik(2005)은 이번 연구와 가장 깊은 연관을 가진 선행연구로, 이번 연구 자료가 사용하는 개인별 설문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다만 이번 연구는 Mayda and Rodrik(2005)이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최근의 설문(2013년, 2020년)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동남아·대양주 4개국 유권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회귀분석을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Mayda and Rodrik(2005)은 설문 국가들에 대한 합동 추정(pooled estimation)을 통해서 일반적인 경제학적 현상에 대해서 접근했다면, 이번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더욱 집중한다. Mayda and Rodrik(2005)은 국가적 소속감과 종교적 소속감 같은 비경제적 통제 변수를 사용하여 개인의 무역정책 선호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다. 요소 부존 접근법과 특정요소 접근법 모두 현실 설명력을 가짐을 회귀분석을 통해서 보였다.

Karakas, Kim, and Mitra(2021)는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와 이민 장벽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을 요소 부존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더 나아가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와 이민 장벽에 대한 태도가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스웨덴의 선거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무역 장벽에 대한 태도와 이민 장벽에 대한 태도가 인적 자본 부존량(물리적 자본 부존량의 대리 변수(proxy variable)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됨을 보였다. 스웨덴 유권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무역 장벽과 낮은 이민 장벽을 선호했는데, 이는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자본 부국임을 고려한다면 요소 부존 접근법의 이론적인 예측과 부합한다. Karakas, Kim, and Mitra(2021)는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 유권자들의 무역 장벽과 이민 장벽에 대한 태도가 스웨덴 우파 정당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에 대한 투표를 설명하는지를 분석했다. 응답자 개개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역 장벽과 이민 장벽 모두 우파 정당 지지 여부를 유의하게 설명했다.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 확률은 떨어졌고, 높은 이민 장벽을 선호할수록 우파에 대한 지지 확률은 높아졌다. 하지만 개개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제한다면, 무역 장벽의 투표 행위 설명력은 사라지고, 이민 장벽의 투표 행위 설명력만 유지되었다. Karakas, Kim, and Mitra (2021)는 이를 최근 스웨덴 선거에서 만연히 퍼지고 있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연결 지으며 함의를 도출한다.

이번 연구는 유권자들의 이민 정책에 대한 태도는 다루지 않지만, Karakas, Kim, and Mitra(2021)와 같이 특정 국가 유권자들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자본 부국으로 이해될 수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상대적 노동 부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여겨지는 필리핀과 태국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가간의 비교분석적 이해를 도모한다. 유권자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가 투표 행위와도 연관되는지를 설명하여 내생적 무역정책 형성의 미시적 기초를 연구한다는 점에서도 Karakas, Kim, and Mitra(2021)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 다만 스웨덴 선거 설문자료에는 응답자들이 개개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자기 응답(self report) 방식으로 표시한 정보가 있어서 정치 성향과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를 별개의 개념으로 다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응답자들의 정치 이데올로기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Karakas, Kim, and Mitra(2021)와 통제변수의 구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간 분석과 개인 유권자 단위 분석에 더하여, 최근에는 선거구 단위 분석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Autor *et al.*(2020)은 미국의 선거구별 공

화당 득표율이 대중 무역 노출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통근 지역(commuting zone) 단위로 수입 침투(import penetration) 변수를 구축했다. 수입 침투 변수를 통해 대중 무역에 많이 노출된 지역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득표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미국 국내 지역의 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이 중국과의 무역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정치적 결과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뒤이은 미국의 무역 장벽 재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때, Autor *et al.*(2020)의 연구는 내생적 무역정책 형성과 관련된 실증 연구의 현실 설명력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Autor *et al.*(2020) 이외에도 무역과 지역 단위 선거 결과를 연결 짓는 논문은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행정구역 단위(county-level) 분석을 행한 Che *et al.*(2022)과 NAFTA 통과를 기준시점으로 삼고 미국 지역 단위 분석을 실시한 Choi *et al.*(2020), 미국 통근 지역(commuting zone) 단위의 경제 상황 및 무역 노출도를 기준으로 개인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Ballard-Rosa, Jensen, and Scheve(2022)와 Cerrato, Ferrara, and Ruggieri(2018)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이외에도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접근법의 실증 분석 문헌들도 최근에 활발히 등재되고 있다. Barone and Kreuter (2021)는 이탈리아 지역 단위 분석을 실시했고, Colantone and Stanig(2018a)는 영국 지역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다수 유럽 국가들을 동시에 고려한 Colantone and Stanig(2018b, 2018c), Rommel and Walter(2018)는 국가간의 비교 분석적 통찰을 제공했다. Dippel *et al.*(2017)과 Malgouyres (2017)는 각각 독일과 프랑스의 지역들을 분석 단위로 삼아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Rodrik(2021)은 위의 선거구 및 지역 단위 연구들에 대한 문헌 리뷰와 함께 국제 무역이 최근의 정치 현상, 특히 대중주의적 정치(populism)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직관을 제시한다. 이 분야의 연구 흐름은 위와 같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필리핀과 태국 같

은 동남아 신흥국에 집중한 연구 성과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연구는 선거구 및 행정구역 등의 지역 단위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실증 분석이 아니기에 연구 접근법에 있어서 직접적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여 향후 이루어질 국내 지역 단위 분석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 중에서 이번 연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연구를 다시 강조한다면, Mayda and Rodrik(2005)과 Karakas, Kim, and Mitra (2021)가 이번 연구와 가장 연관이 깊다. Mayda and Rodrik(2005)은 데이터의 활용과 변수 구축, 그리고 요소 부존 접근법과 특정 요소 접근법을 실증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번 연구와 아주 많은 점을 공유한다. Karakas, Kim, and Mitra(2021)는 유권자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를 투표 행위와도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선행연구들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유권자 단위 분석을 위한 실증 분석 모형 구축을 다음 장부터 논한다. 먼저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소개하며 변수 구축 과정을 다룬 후에, 본격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논의를 확장한다.

제3장 동남아·대양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결정요인

1. 설문 데이터 소개

이번 연구가 실증 분석에 활용하는 설문조사 자료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 설문 데이터다. ISSP 설문 데이터는 수년에 한 번 응답자들의 무역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 ISSP의 경우 이 질문이 포함된 설문 연도는 1995년, 2003년, 2013년, 2020년이다.[2] ISSP의 각 설문 연도는 4개국 모두를 다루지 않고 4개국 중 일부 국가의 응답자들에게 위의 문항을 질문해왔다. 각 설문 연도에서 조사된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분포는 [표 3-1]과 같다.[3] ISSP 조사팀은 응답자의 식별 아이디(id)를 조사 회차에 걸쳐서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통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표 3-1. 각 설문연도별 동남아·대양주 4개국 조사 분포

설문 / 조사 연도	동남아·대양주 4개국 조사 분포
ISSP 1995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ISSP 2003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ISSP 2013	필리핀
ISSP 2020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ISSP 설문의 1995 National Identity I, 2003 National Identity II, 2013 National Identity III, 2020 Environment IV(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3. 2. 15)를 활용했다.
3) ISSP 연구팀은 향후 ISSP 2020에 설문 국가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 기간(2023년 1월 9일~8월 14일) 동안 사용 가능한 버전의 ISSP 2020을 활용했다.

네 번의 ISSP 조사(1995, 2003, 2013, 2020)에서 연구팀은 유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무역정책에 관한 의견을 질문했다.

[COUNTRY] should limit the import of foreign products in order to protect its national economy

응답자가 속한 국가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 문항이다.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 5점 척도(disagree strongly,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agree strongly)로 응답했다. 이 문항의 답변은 이번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 핵심적인 변수인 $TradeBar_i$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아래첨자 i는 각각의 응답자 개인을 의미한다고 할 때, $TradeBar_i$는 응답자 i가 선호하는 무역 장벽의 높이나 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직관에 부합하도록 이번 연구에서 $TradeBar_i$는 위의 문항에 disagree strongly로 답변했다면 1을, agree strongly로 응답했다면 5의 값을 갖는다. 그 사이의 응답들(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2, 3, 4의 값을 갖는다.

위의 정의에 따라 $TradeBar_i$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i가 선호하는 무역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TradeBar_i$의 값은 크고, 반면에 응답자 i가 낮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이 변수의 값은 작다. 다시 말해, $TradeBar_i$는 각 응답자가 선호하는 수준의 무역 장벽을 나타냄을 통해 개개인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표 3-2]는 ISSP 2020에서 $TradeBar_i$의 요약 통계량을 나타낸다. ISSP 2020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의 총 표본 통계는 표의 가장 하단 행에 기재되어 있다. 표본 평균이 3.2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면, 필리핀과 태국의 표본 평균은 전체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반면에 뉴질랜드는 총 표본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에서 $TradeBar_i$의 평균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 표에 나

타난 ISSP 2020이 분석한 국가들 중에 러시아, 슬로베니아와 함께 가장 높은 평균값을 형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필리핀과 태국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무역 장벽의 수준은 뉴질랜드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호주는 ISSP 2020에서 다루지 않는 관계로 같은 표에 표본 평균 값을 도시하지 않았지만, ISSP 2003에서 필리핀보다는 낮고 뉴질랜드보다는 높은 $TradeBar_i$ 표본 평균을 기록했다.4)

표 3-2. ISSP 2020에서 $TradeBar_i$ 요약 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수
필리핀	3.752	0.986	1,489
태국	3.580	1.031	1,365
뉴질랜드	3.117	1.101	961
오스트리아	3.344	1.232	1,237
대만	2.584	0.971	1,760
덴마크	2.773	1.229	1,121
핀란드	2.751	1.093	1,092
독일	3.150	1.210	1,652
헝가리	3.322	0.995	970
아이슬란드	2.894	1.149	1,130
일본	2.888	1.032	1,406
러시아	3.505	1.386	1,545
슬로베니아	3.508	1.155	1,079
스위스	3.372	1.111	4,215
총 표본	3.208	1.174	21,022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ISSP 설문은 위와 같은 정책 선호에 관한 문항들 이외에도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조사했다. 그중에서 이번 연구가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는 각 응답자들의 교육 수준과 개별 소득, 가구 소득, 성별, 연령 등이다. ISSP 설문의 경우 각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한다.

4) ISSP 2003에서 표본 평균값은 호주: 3.748, 필리핀: 3.913, 뉴질랜드: 3.534이다.

2020 설문의 경우, no education(incomplete primary)/primary education/lower secondary education/upper secondary education/post 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short-cycle tertiary/lower tertiary(BA)/upper tertiary(MA)/PhD, post tertiary specialization의 아홉 범주로 구분한다. $Education_i$는 이를 0부터 8까지의 숫자로 코딩하여 응답자 i의 인적 자본 보유량에 대한 변수로 사용된다. 각국의 현지 화폐단위로 조사된 개인 소득 $PersonalIncome_i$과 가구 소득 $HouseholdIncome_i$ 역시 통제변수로서 활용된다. Age_i는 연령을, $Female_i$는 성별을 각각 의미하는 변수다. 응답자 i가 여성일 경우 $Female_i$는 1의 값을 갖고, 남성일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2. 유권자의 생산 요소 부존과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이번 절과 다음 절은 동남아·대양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결정요인을 갖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이번 절은 헥셔-올린 유형의 요소 부존 모형이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바와 일관되게 4개국 유권자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가 설명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본다. 즉 유권자가 속한 국가의 상대적 요소 부존에 따라 노동을 보유한 유권자와 자본을 보유한 유권자가 무역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연구에서 핵심적인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TradeBar_i$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에 관해 묻는 문항이 아닌, 전 산업에 걸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문항을 통해 구축된 변수다. 이에 특정 산업 수준의 무역 장벽 부과가 아닌, 국가 전반의 무역 장벽을 설정하는 무역정책을 고려하여 이론적인 예측을 검증한다.[5)]

5) $TradeBar_i$를 구성하는 데 활용된 문항(*[COUNTRY] should limit the import of foreign products in order to protect its national economy*)의 표현이 수입 경쟁 산업(import competing industry)에 대한 보호에 관해 묻는 어조로 읽힐 수는 있으나, 명료하게 수입 경쟁 산업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구 역시 Mayda and Rodrik(2005) 등의 선행 연구와 일관되게 모든 산업 전반에 관한 무역 장벽에 관해 묻는 문항으로 해석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2국가 2섹터 2요소(생산요소) 모형에서 헥셔-올린 정리에 따르면 자본 부국에서 자본 소유자는 자유무역을 통해 양의 후생 효과를 누리지만, 노동 소유자는 음의 후생 효과를 누린다. 반대로 노동 부국에서 노동 소유자는 자유무역을 통해 양의 후생 효과를 누리지만, 자본 소유자는 음의 효과를 누린다. Hillman(1989)은 분석 모형을 2개 이상의 다수 섹터로 확장하더라도 위의 이론적 예측은 여전히 타당함을 논했다. 위와 같은 이론적인 예측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 부국인 필리핀, 태국에서는 인적 자본을 많이 소유한 유권자일수록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자본 부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인적 자본을 많이 소유한 유권자일수록 낮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각 유권자 i의 물리적 자본 부존을 직접 측정하는 변수가 있으면 이론과의 괴리가 없는 실증 분석이 될 수 있으나, ISSP 데이터에는 응답자의 물리적 자본 소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이에 응답자 i의 인적 자본에 관한 정보인 최종 학력 수준 $Education_i$를 핵심적인 독립 변수로서 대신 사용한다. 이는 앞 장에서 소개한 선행 연구들도 취하고 있는 방법이며, 인적 자본 보유량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물리적 자본, 혹은 기술적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이를 기반으로 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상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TradeBar_i = X\beta_1 + \nu_i \qquad [식\ 3\text{-}1]$$

통제변수 행렬 X는 $Education_i$, $PersonalIncome_i$, $HouseholdIncome_i$, Age_i, $Female_i$ 등을 포함한다. 횡단면 선형 회귀분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선형 회귀분석의 일반적 가정이 성립한다면 계수 벡터 β_1는 각 설명 변수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로 바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연구가 Mayda and Rodrik(2005) 등의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갖는 차별성은 동남

아·대양주 4개국에 대한 심층 분석이다. 이에 위의 회귀분석을 4개국에 대해 별도로 시행하여 각국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4개의 표는 4개국의 표본들을 이용한 추정 결과다.

표 3-3. 필리핀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구분	ISSP 1995	ISSP 2003	ISSP 2003	ISSP 2013	ISSP 2013	ISSP 2020	ISSP 2020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Education_i$	0.0786*** (0.0195)	0.0667** (0.0330)	0.0952*** (0.0249)	0.0517*** (0.0192)	0.0531*** (0.0196)	0.0244* (0.0132)	0.0307** (0.0135)
$Personal\ Income_i$		−0.00000205 (0.00000884)		0.00000261 (0.00000503)		0.00000800** (0.00000342)	
$Household\ Income_i$			−0.00000384 (0.00000253)		0.000000581 (0.00000259)		0.00000366* (0.00000208)
Age_i	0.00142 (0.00180)	−0.00018 (0.00346)	0.00444* (0.00227)	−0.00281 (0.00200)	−0.00243 (0.00199)	−0.00204 (0.00163)	−0.00202 (0.00168)
$Female_i$	−0.0213 (0.0532)	−0.0170 (0.0912)	−0.154** (0.0638)	−0.0459 (0.0638)	−0.0459 (0.0627)	0.0282 (0.0531)	0.00886 (0.0530)
Constant	3.258*** (0.127)	3.817*** (0.188)	3.599*** (0.134)	3.936*** (0.117)	3.929*** (0.117)	3.716*** (0.0947)	3.694*** (0.0981)
표본 크기	1186	591	1063	1183	1174	1446	140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선형 추정 결과.

먼저 ISSP의 4개 연도에서 모두 다루어진 필리핀의 경우,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요소 부존 모형의 이론적 예측과 일관되는 패턴을 가진다. ISSP 1995에서는 필리핀 응답자들의 소득 수준이 조사되지 않아서 소득 수준이 통제되지 않았다. 나머지 설문 연도에서는 개인 소득($PersonalIncome_i$)과 가구 소득($HouseholdIncome_i$)이 번갈아가며 통제되었다. [표 3-3]의 모든 열에서 $TradeBar_i$과 $Education_i$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교육 수준으로 측정된 인적 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하고, 반대로 인적 자본 보유량이 적을수록 더 낮은 무역 장벽을 선호하는 경향이 필리핀에서 관

찰된다. 이는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노동 부국임을 고려하면 헥셔-올린 유형의 요소 부존 모형의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발견이다. 필리핀의 비교우위 산업이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상황에서 고학력 유권자들은 자유 무역으로 인해 후생 손실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학력 유권자들은 노동 집약적 노동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양의 후생 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표 3-3]의 모든 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띠며 관찰된다. 반면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연령, 성별이 무역정책 선호와 갖는 관계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2020년 설문에서 개인 소득 혹은 가구 소득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했다. 2003년 설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했다.

ISSP 2020의 태국 응답자 표본을 활용한 추정 결과는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앞의 필리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radeBar_i$과 $Education_i$ 간의 양의

표 3-4. 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구분	ISSP 2020 $TradeBar_i$	ISSP 2020 $TradeBar_i$
$Education_i$	0.0954*** (0.0194)	0.0938*** (0.0216)
$Personal\ Income_i$	2.54e-08 (0.000000104)	
$Household\ Income_i$		3.19e-08 (0.000000105)
Age_i	0.0104*** (0.00264)	0.0120*** (0.00305)
$Female_i$	0.0566 (0.0679)	0.0339 (0.0759)
Constant	2.806*** (0.161)	2.739*** (0.184)
표본 크기	944	76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선형 추정 결과.

상관관계가 모든 열에서 관찰된다. 교육 수준이 높은 태국 응답자일수록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태국이 상대적으로 노동 부국임을 감안하면 앞 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다. 태국의 경우 소득 측정 방법과 관련 없이 모든 열에서 연령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연령과 관련된 부분이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더 깊게 알아보려면, 연령별 생산 요소 분포, 혹은 연령별 교육 수준 분포에 관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소득이나 성별은 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으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표 3-5. 호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구분	ISSP 1995	ISSP 1995	ISSP 2003	ISSP 2003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Education_i$	−0.144*** (0.0183)	−0.140*** (0.0180)	−0.103*** (0.0141)	−0.0956*** (0.0143)
$Personal\ Income_i$	−0.00000449*** (0.000000817)		−0.00000454*** (0.000000950)	
$Household\ Income_i$		−0.00000311*** (0.000000547)		−0.00000356*** (0.000000592)
Age_i	−0.00143 (0.00151)	−0.00198 (0.00151)	0.00521*** (0.00151)	0.00417*** (0.00161)
$Female_i$	0.158*** (0.0451)	0.224*** (0.0424)	0.0620 (0.0476)	0.118** (0.0467)
Constant	4.834*** (0.141)	4.837*** (0.139)	3.910*** (0.110)	3.958*** (0.116)
표본 크기	1960	2039	1865	183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선형 추정 결과.

[표 3-5]는 호주 시민들의 ISSP 설문조사 응답을 기반으로 회귀분석 모형을 추정한 결과다. 필리핀과 태국의 표본에서 관찰되었던 경향과는 다르게, $Education_i$가 음의 계수를 모든 열에서 보이고 있다. 즉 호주의 응답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낮은 무역 장벽을 선호한다. 호주가 필리핀과 태국에

비해서 자본 부국임을 고려해 본다면, 개개인의 인적 자본 부존량과 선호 무역 장벽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요소 부존 국제 무역 모형의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자본 부국인 호주에서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유권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후생 손실을 예상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에 비해서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하게 된다. 소득 수준 역시 응답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호주의 유권자들은 개인 소득, 혹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낮은 무역 장벽을 선호한다. 2003년 설문의 표본으로 분석했을 때, 호주 응답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하고, 1995년의 표본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표 3-6]은 뉴질랜드 응답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ISSP 1995, 2003, 2020을 활용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호주 응답자 표본에서와 같이 뉴질

표 3-6.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구분	ISSP 1995	ISSP 1995	ISSP 2003	ISSP 2003	ISSP 2020	ISSP 2020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Education_i$	-0.233*** (0.0354)	-0.221*** (0.0357)	-0.105*** (0.0247)	-0.113*** (0.0253)	-0.0661*** (0.0200)	-0.0659*** (0.0202)
$Personal\ Income_i$	-0.00000986*** (0.00000209)		-0.00000832*** (0.00000143)		-0.00000341*** (0.000000941)	
$Household\ Income_i$		-0.00000972*** (0.00000167)		-0.00000604*** (0.00000111)		-0.00000267*** (0.000000815)
Age_i	-0.000263 (0.00233)	-0.00346 (0.00246)	0.00433** (0.00214)	0.00156 (0.00231)	0.00394** (0.00189)	0.00182 (0.00200)
$Female_i$	0.137* (0.0767)	0.223*** (0.0733)	0.00172 (0.0748)	0.0737 (0.0732)	0.298*** (0.0728)	0.355*** (0.0738)
Constant	4.782*** (0.243)	4.988*** (0.250)	3.744*** (0.145)	3.911*** (0.162)	3.200*** (0.153)	3.331*** (0.173)
표본 크기	934	904	878	839	876	83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선형 추정 결과.

랜드 유권자들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유무역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2003년과 2020년 조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하는 현상이 개인 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통제했을 때 나타난다. 1995년 조사와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여성이 뉴질랜드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한다.

4개국에 대한 개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국의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는 헥셔-올린 기반의 요소 부존 모형의 이론적 예측과 일관되게 설명된다. 상대적으로 노동 부국으로 분류되는 필리핀과 태국에서는, 인적자본 부존량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한다. 반면에 자본 부국으로 분류되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유권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낮은 무역 장벽을 선호한다.

[표 3-3]부터 [표 3-6]까지의 분석은, 요소 부존 모형의 예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유권자의 산업 소속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는 못한다. 응답자가 비교우위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세계시장 진출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혹은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수입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요소 부존 모형의 예측은 생산 요소가 국내 산업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기(long-run) 가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가 단기에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에 특정 요소 접근법(specific-factor approach)에 기반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이러한 우려를 적절히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 특정 요소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를 논하고, 회귀분석 결과를 논한다.

3. 유권자의 산업 소속과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제2장 1절과 앞의 절(제3장의 2절)의 끝에서 논했듯이 헥셔-올린 유형의 요소 부존 접근법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좀 더 현실적인 가정이 고려된 실증분석을 실시하려면 특정 요소 접근법(specific-factor approach)의 통찰을 적절히 차용할 필요가 있다. 특정 요소 접근법의 핵심적 통찰은 생산요소가 단기에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어서 산업 간 이동에 경직성이 있을 때, 개별 생산요소는 산업 소속에 따라 다른 보호무역의 후생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산업간 이동이 가능한 이동 가능 생산요소(mobile factor)의 경우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모호하지만, 단기에 특화가 이루어져 산업간 이동이 불가능한 특정 고정 생산요소(specific factor)의 경우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다. 수출 산업에 속한 특정 고정 생산요소 소유자는 보호무역으로 인한 음의 후생효과 때문에 보호무역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반면에 수입 산업에 속한 특정 고정 생산요소 소유자는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양의 후생 효과를 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특정 요소 접근법의 이론적 이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산업 소속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어느 국가나 교역재 산업이 아닌 비교역재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교역재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이 비교역재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에 비해 통상 관련 이슈나 무역정책의 향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앞의 절에서 분석한 요소 부존 접근법 모형은 이러한 노동자의 다양한 산업 소속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절에서는 Mayda and Rodrik(2005)이 구축한 응답자별 산업 소속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확장하고자 한다.

ISSP 데이터는 응답자의 직업을 국제노동기구의 ISCO(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4-digit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변수로 구축했

다. ISCO 분류는 개개인의 산업 소속보다는 업무에 따른 직업에 관한 분류이기 때문에 각 항목이 재화별 분류 코드와 상응하지 않는다. 이에 Mayda and Rodrik(2005) 역시 ISCO 분류를 재화 코드와 매칭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연구는 ISSP 2020의 ISCO 08 코드를 SITC Rev.3 재화 코드와 상응시켰다. Mayda and Rodrik(2005)은 당시 많이 쓰이던 World Trade Analyzer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54개의 산업을 ISCO 08과 상응시켰다. 이번 연구는 SITC Rev.3 재화 코드 기준으로 49개 산업과 상응시켰다. ISSP 2020은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3개국을 대상으로 다음의 변수를 사용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49개의 산업 s에 관하여 각국 k가 갖는 비교우위 여부 CA_{sk}와 비교열위 여부 CD_{s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특정 연도를 상정한 구축이기 때문에, 연도를 나타내는 아래첨자 t가 생략된 표기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각국 k의 산업 s의 수입, 수출을 각각 M_{sk}, X_{sk}라고 하면, 더미변수 CA_{sk}와 CD_{sk}는 다음과 같이 구축된다.

$$CA_{sk} = \begin{cases} 1, \text{if } M_{sk} - X_{sk} - \lambda M_{sk} < 0 \\ 0, \text{if } M_{sk} - X_{sk} - \lambda M_{sk} > 0 \end{cases} \quad \text{[식 3-2]}$$

$$CD_{sk} = \begin{cases} 1, \text{if } M_{sk} - X_{sk} - \lambda M_{sk} > 0 \\ 0, \text{if } M_{sk} - X_{sk} - \lambda M_{sk} < 0 \end{cases} \quad \text{[식 3-3]}$$

여기서 λ는 조정 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ambda = \frac{\Sigma_s (M_{sk} - X_{sk})}{\Sigma_s M_{sk}} \quad \text{[식 3-4]}$$

λ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서는 양의 값을 갖고,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다. 다시 말해 λ는 균형 수지 달성을 위해 조정되

어야 할 액수가 수입의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다. 이를 CA_{sk}와 CD_{sk}구축에 활용함을 통해, 비교우위($CA_{sk} > 1$)는 조정된 무역 수지($M_{sk} - X_{sk} - \lambda M_{sk}$)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교열위($CD_{sk} > 1$)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해 구축한다. ISCO 08과 재화 코드를 상응시킨 후 Balassa (1965)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ISCO 08과 매치된 SITC 산업군이 2-digit 혹은 3-digit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비교군과 대조군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도 위의 Mayda and Rodrik (2005) 방법을 활용한다.

앞 절에서 추정한 선형 회귀분석 모델에 Mayda and Rodrik(2005)과 같이 CA_{sk}와 CD_{sk}를 추가하여 통계적 추정을 실시했다. 응답자가 속한 산업이 교역 가능한 산업인지 교역이 불가능한 산업인지를 뜻하는 더미변수인 $Tradable_s$도 통제하여 비교역재를 생산하는 유권자의 태도는 이론의 예측과는 다른지를 확인했다. [표 3-7], [표 3-8], [표 3-9]는 ISSP 2020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 앞 절의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에 대한 분석을 확장한 것이다.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연령, 성별과 함께 응답자들의 산업 소속과 비교우위 여부를 알 수 있는 변수들인 CA_{sk}와 CD_{sk}가 함께 통제되어 있다. 그리고 CA_{sk}와 CD_{sk} 대신에 교역재와 비교역재 여부에 관한 변수인 $Tradable_s$를 활용하여 강건성을 확인했다.

표 3-7. 산업소속을 고려한 필리핀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구분	ISSP 2020 $TradeBar_i$	ISSP 2020 $TradeBar_i$	ISSP 2020 $TradeBar_i$	ISSP 2020 $TradeBar_i$
$Education_i$	0.0227* (0.0134)	0.0295** (0.0137)	0.0240* (0.0133)	0.0306** (0.0136)
$Personal\ Income_i$	0.00000806** (0.000003)		0.00000800** (0.000003)	
$Household\ Income_i$		0.00000357* (0.000002)		0.00000365* (0.000002)
Age_i	-0.00195 (0.00164)	-0.00195 (0.00169)	-0.00201 (0.00164)	-0.00201 (0.00168)

표 3-7. 계속

구분	ISSP 2020	ISSP 2020	ISSP 2020	ISSP 2020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Female_i$	0.0198 (0.0546)	0.00108 (0.0547)	0.0258 (0.0544)	0.00820 (0.0545)
CA_{sk}	0.0831 (0.106)	0.100 (0.107)		
CD_{sk}	−0.0592 (0.0752)	−0.0527 (0.0766)		
$Tradable_s$			−0.0135 (0.0648)	−0.00356 (0.0661)
Constant	3.725*** (0.0966)	3.701*** (0.100)	3.720*** (0.0965)	3.695*** (0.100)
표본 크기	1446	1407	1446	140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선형 추정 결과.

표 3-8. 산업소속을 고려한 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구분	ISSP 2020	ISSP 2020	ISSP 2020	ISSP 2020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Education_i$	0.0904*** (0.0201)	0.0850*** (0.0226)	0.0918*** (0.0200)	0.0849*** (0.0225)
$Personal\ Income_i$	2.43e-08 (0.000000)		2.43e-08 (0.000000)	
$Household\ Income_i$		2.93e-08 (0.000000)		2.93e-08 (0.000000)
Age_i	0.0104*** (0.00265)	0.0118*** (0.00306)	0.0104*** (0.00264)	0.0118*** (0.00305)
$Female_i$	0.0559 (0.0683)	0.0239 (0.0763)	0.0527 (0.0681)	0.0240 (0.0762)
CA_{sk}	−0.0712 (0.0795)	−0.119 (0.0873)		
CD_{sk}	0.0873 (0.213)	−0.131 (0.239)		
$Tradable_s$			−0.0558 (0.0765)	−0.120 (0.0844)
Constant	2.836*** (0.166)	2.818*** (0.192)	2.835*** (0.166)	2.818*** (0.192)
표본 크기	944	763	944	76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선형 추정 결과.

표 3-9. 산업소속을 고려한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구분	ISSP 2020	ISSP 2020	ISSP 2020	ISSP 2020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TradeBar_i$
$Education_i$	-0.0644*** (0.0201)	-0.0641*** (0.0204)	-0.0660*** (0.0200)	-0.0658*** (0.0203)
$Personal\ Income_i$	-0.00000344*** (0.00000094)		-0.00000342*** (0.00000094)	
$Household\ Income_i$		-0.00000267*** (0.00000081)		-0.00000267*** (0.00000081)
Age_i	0.00393** (0.00189)	0.00180 (0.00201)	0.00395** (0.00189)	0.00182 (0.00200)
$Female_i$	0.306*** (0.0743)	0.364*** (0.0755)	0.300*** (0.0740)	0.357*** (0.0751)
CA_{sk}	0.137 (0.177)	0.156 (0.182)		
CD_{sk}	-0.00574 (0.114)	-0.00762 (0.115)		
$Tradable_s$			0.0157 (0.0977)	0.0118 (0.0994)
Constant	3.185*** (0.156)	3.313*** (0.176)	3.196*** (0.156)	3.328*** (0.175)
표본 크기	876	838	876	83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선형 추정 결과.

세 개의 표 모두 앞 절의 요소 부존에 관한 핵심 발견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Education_i$ 계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은 산업 소속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앞 절의 발견과 다르지 않았다. 노동 부국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필리핀과 태국에서는 인적 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고, 반대로 뉴질랜드에서는 인적 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다. 반면 유권자의 산업 소속에 따른 비교우위·열위 부문 종사 여부를 알려주는 CA_{sk}와 CD_{sk}는 어느 표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교역재와 비교역재 여부를 알려주는 변수인 $Tradable_s$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나타내지 못했다. Mayda and Rodrik(2005)의 합동 추정(pooled estimation)에서 CA_{sk}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CD_{sk}는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점을 감안[6]하면, 이번 연구의 국가별 분석에서 두 변수 모두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CA_{sk}와 CD_{sk}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계수 값을 갖는 것이 특정 요소 접근법과 모순되는 결과인 것은 아니다. 만약 보호무역정책에 관해서 불확실한 의견을 갖는 이동 가능 생산요소 소유자가 표본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CA_{sk}와 CD_{sk}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ISSP 데이터를 통해 유권자들의 산업 소속은 분별이 가능하지만, 개개인의 생산 요소가 산업간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는 분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자세히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교역재 산업 종사 여부를 나타내는 $Tradable_s$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역시 비슷하게 해석해 볼 수 있다. 교역재 산업과 비교역재 산업 모두 단기에 이동 가능 생산요소와 특정 고정 생산요소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 가능 생산요소의 사용 비중이 높다면 $Tradable_s$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절에서 살펴본 3개국에서는 특정 고정 생산요소를 소유한 유권자들이 산업 소속(비교우위 산업 혹은 비교열위 산업)에 따라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이동 가능 생산요소 소유자들의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혹은 3개국에서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장기적 관점을 대변하는 인적자원 부존량의 설명력이 다른 어떠한 변수들의 설명력보다도 더 분명하기 때문이다.

6) Mayda and Rodrik(2005)은 비교열위 산업에 속한 응답자는 보호무역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 결과를 공유했다.

제4장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정치경제

1.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와 투표행위

이번 장은 동남아·대양주 4개국 유권자들의 무역 장벽에 대한 태도가 총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설명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4개국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 핵심인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에서 국제 무역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각 당이 선거 캠페인에서 주장한 목표 관세 수준이나 공약했던 보호무역정책의 강도를 수량화할 수 있다면 내생적 무역정책 형성 이론에 대한 조금 더 직접적인 실증 분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각 정당의 무역정책에 대한 공약을 수량화하여 변수를 구축하는 것은 별도의 질적 및 양적 분석을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련 경제학 선행 연구들에서는 유력 좌파 정당과 유력 우파 정당, 혹은 포퓰리스트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개개인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로 설명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내생적 무역정책의 형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검증한다. 이번 연구 역시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총선거에서 유력 정당들과 포퓰리스트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종속변수로 삼는 분석을 행한다.

ISSP 설문 데이터는 각국의 응답자들에게 가장 최근의 총선에서 어떠한 정당에 투표했는지를 묻고 있다. 응답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에는 전통적인 유력 정당과 함께 군소정당도 포함되어 있다. ISSP 2020에서 조사된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의 경우 각각 2016, 2019, 2020 총선거에서 응답자들이 어느 정당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에 대한 조사는 아쉽게도 ISSP

2003이 가장 최근인데, ISSP 2003은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 정당이 아닌, 각 응답자의 선호 정당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호주에 관한 분석은 2003년 기준 각 응답자의 선호 정당이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설명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 확률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방법은 로짓(Logit) 모형, 프로빗(Probit) 모형과 같은 비선형 추정 방법과 선형 확률(Linear Probability) 모형과 같은 선형 추정 방법이 있다. 관측치 수나 통제변수의 수가 아주 많아서 각 독립변수의 한계 효과(margianl effect)를 구하는 것이 연산적으로 비효율적일 때 선형 확률 모형을 채택하는 연구자들이 많으나, 선형 확률 모형은 확률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적합값(fitted value)이 0과 1 사이가 아닐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이번 연구는 표본의 크기나 통제변수의 숫자로 보았을 때, 선형 확률 모형을 추정할 유인이 없으므로, 로짓 모형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 확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7)

$$\Pr[Partydum_i = 1|\widetilde{X}] = F(\widetilde{X}^T\beta, \epsilon) \qquad [식\ 4\text{-}1]$$

종속변수 $Partydum_i$는 각국의 선거에서 유권자 i의 유력 정당 및 포퓰리스트 정당에 대한 투표 여부 더미변수를 총칭한다. 필리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2016년 선거에서 유력 정당이었던 필리핀 민주당(PDP Laban Party)과 자유당(Liberal Party)의 선택 여부를 분석한다. 각 정당에 대한 투표 여부를 기반으로 PDP_i와 $Liberal_i$를 구축하여 $Partydum_i$으로 활용한다. 태국의 경우 2019년 선거에서 민주당(Democrat Party)과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에 대한 투표 여부로 변수를 구축하여 각각 $Democrat_i$, $Pheu_i$로 사용한다. 뉴질랜드는 2020년 선거에서 노동당(Labour Party)과 국민당(National

7)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더라도 전반적인 추정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Party)에 대한 유권자 i의 선택을 기반으로 $Labour_i$와 $National_i$를 종속변수 $Partydum_i$로 활용한다. 호주의 경우 2003년에 조사된 유권자 i의 선호 정당을 기준으로, 유력 정당인 자유당(Liberal Party)과 노동당(Labour Party), 그리고 좌성향 환경 정당인 녹색당(Green Party),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일국당(One Nation Party)에 대한 더미변수($AuLib_i$, $AuLab_i$, $Green_i$, One_i)를 각각 구축한다. 다시 말해 $Partydum_i$는 각국 유력 정당 및 포퓰리스트 정당에 대한 선택 여부의 더미변수를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활용한다.

$$Partydum_i \in \left\{ \begin{matrix} PDP_i, Liberal_i, Democrat_i, Pheu_i, Labour_i, National_i, \\ AuLib_i, AuLab_i, Green_i, One_i \end{matrix} \right\} \quad [식\ 4\text{-}2]$$

$\widetilde{X}$는 통제변수들을 포함하는 행렬로, 이번 분석의 가장 큰 관심은 각 응답자 i의 자국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인 $TradeBar_i$다. 개별 유권자가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 확률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에 대한 이해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치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TradeBar_i$ 이외에도 앞의 장들에서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와 산업 소속과 관련한 변수들 모두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그리고 투표 행위에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 모두 지역주의적 투표행위가 만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도 ISSP에 포함된 개별 응답자의 거주 지역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함수 $F(\bullet)$는 로지스틱 분포의 분포함수이고, $\Pr[Partydum_i = 1|\widetilde{X}]$는 $Partydum_i$의 값이 1일 조건부 확률에 대한 표현이다.

비선형 모형에서 추정 계수 자체는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불충분하다. 이에 각 설명 변수에 대한 편미분 값인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를 도출하여 제시해야 한다. 한계 효과 계수 추정량의 표준 오차 또한 별도로 도출하여 통계적 검정을 실시해야 적절한 비선형 모형 분석이 될 수 있

다. 이번 연구는 델타 방법(Delta Method)을 이용하여 각 설명변수의 한계 효과가 갖는 표준 오차를 계산한다.

이번 장의 분석에서 핵심 독립변수로 활용되는 $Trade\,Bar_i$는 앞의 3장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요소 부존 접근법 및 특정 요소 접근법에 기반하여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형성의 결정요인을 3장에서 논할 수 있었다. 투표행위와 보호무역주의 성향 간의 연관성에 집중하는 이번 장에서도 유권자들의 교육 수준 및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정보가 3장과 마찬가지로 모두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두 장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다면 변수간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제기된다. Karakas, Kim, and Mitra (2021)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접근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활용되는 ISSP 설문 자료에는 도구변수로 활용되기에 적합한 설문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Mayda and Rodrik(2005) 등의 기존 문헌들 역시 별도의 도구 변수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구의 3장과 4장의 분석 결과는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분석 결과임을 밝힌다. 3장의 내용은 국제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인과관계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번 4장의 내용은 단순 상관관계로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필리핀

ISSP 2020은 필리핀 응답자들의 2016 총선거 당시의 투표 정당을 묻고 있다. 2016년 5월, 필리핀의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전국 선거와 함께 하원 전 의석에 대한 총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되었다.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필리핀 민주당과 자유당은 치열한 논쟁과 접전을 벌였으나, 대통령 선거와 총선 모두 필리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며 필리핀 민주당을 이끈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전임자인 베그니노 아퀴노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당은 베그니노 아퀴노 대통령의 어머니이자 필리핀의 제11대 대통령을 역임한 코라존 아퀴노 대통령도 몸담았던 정당으로서 필리핀 진보 진영 최대 정당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선거에서 이끈 필리핀 민주당은 범좌파 진영의 정당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좌파 포퓰리즘적 성향을 강하게 띠는 정당이다. 마약 단속 등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초강경 조치들을 공약해왔고, 집권 후에 실제로 기존의 마약 단속 계획을 강행하여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인권 탄압, 권위주의적 조치 등에 관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통상정책에서는 필리핀 민주당이 눈에 띄는 포퓰리즘적 보호무역 어젠다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기존의 친미 및 친서방 노선에 편중된 필리핀의 대외 정책 노선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자주 피력했다. 대신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필리핀의 존재감을 증대하고자 했다. 대외 관계 조정이 반드시 통상정책 조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필리핀 민주당의 대외 노선 재조정 공약이 통상정책에 관한 양당 간의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ISSP 2020 데이터에서도 필리핀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TradeBar_i$ 평균값은 3.76이고, 자유당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평균값은 3.8로, 두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 사이에 통상정책 의견에 기반한 차이점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1]은 필리핀 민주당에 대한 투표 여부 더미변수인 PDP_i를 종속변수로 두고 투표 확률 모형을 추정한 결과다. 로짓(Logit) 모형의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추정한 각 변수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가 [표 4-1]에 기재되어 있다. 유권자 i가 2016년 총선에서 필리핀 민주당에 대해 투표했으면 PDP_i는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TradeBar_i$를 포함하여 앞의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정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주의적 투표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ISSP 2020의 필리핀 응답자들의 주거 지역 정보를 활용했다. ISSP 2020이 섭외한 필리핀 응답자들은 마닐라(Great Manila), 루손 지역(Balance Luzon), 비사야스(Visayas), 민다나오(Mindanao)의 네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한다. 이에 마닐라 지역(Great Manila)을 제외한 세 지역 거주에 관한 더미변수를 통해 지역주의적 투표행위를 통제한다. 소득 수준을 개인 소득($PersonalIncome_i$), 가구 소득($HouseholdIncome_i$) 기준으로 번갈아가며 통제하고, 산업 소속에 따른 국제적 비교우위 여부(CA_{sk}, CD_{sk})와 교역재·비교역재 산업 소속 여부($Tradable_s$) 등도 번갈아가며 통제한다.

설명 변수의 배열 변화와 관계 없이 $TradeBar_i$는 2016년 총선에서 필리핀 유권자들의 필리핀 민주당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표 4-1]의 모든 열에서 $TradeBar_i$의 한계 효과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졌지만, 한계 효과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각하지 못했다. 반면에 각 지역 더미변수는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한계 효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필리핀의 2016년 총선은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적 투표행위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선거로 이해될 수 있다. 루손 지역과 비사야스 지역의 유권자들은 타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필리핀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낮았던 반면에, 민다나오 지역의 유권자들은 타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필리핀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았다. [표 4-1]의 1열, 3열, 5열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필리핀 민주당 지지 가능성의 차이가 관찰되기도 했으나, 나머지 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표 4-1. 필리핀 유권자들의 2016년 선거 정당 선택 결정요인(필리핀 민주당)

구분	PDP_i	PDP_i	PDP_i	PDP_i	PDP_i	PDP_i
$TradeBar_i$	−0.0120 (0.0184)	−0.0185 (0.0184)	−0.0105 (0.0184)	−0.0175 (0.0185)	−0.0116 (0.0184)	−0.0181 (0.0184)
$Education_i$	0.0170* (0.00960)	0.0118 (0.00986)	0.0178* (0.00966)	0.0121 (0.00992)	0.0166* (0.00962)	0.0114 (0.00988)
$Personal\ Income_i$	−0.00000182 (0.00000244)		−0.00000202 (0.00000244)		−0.00000184 (0.00000244)	
$Household\ Income_i$		0.00000161 (0.00000155)		0.00000154 (0.00000155)		0.00000157 (0.00000155)
Age_i	0.00203 (0.00130)	0.00196 (0.00132)	0.00206 (0.00131)	0.00201 (0.00132)	0.00209 (0.00131)	0.00202 (0.00132)
$Female_i$	−0.0537 (0.0380)	−0.0436 (0.0370)	−0.0546 (0.0389)	−0.0455 (0.0380)	−0.0579 (0.0389)	−0.0477 (0.0379)
CA_{sk}			−0.0822 (0.0679)	−0.0559 (0.0694)		
CD_{sk}			0.00988 (0.0533)	−0.00399 (0.0538)		
$Tradable_s$					−0.0228 (0.0446)	−0.0222 (0.0452)
루손	−0.160*** (0.0561)	−0.126** (0.0598)	−0.163*** (0.0560)	−0.127** (0.0600)	−0.158*** (0.0564)	−0.125** (0.0601)
비사야스	−0.228*** (0.0678)	−0.189*** (0.0704)	−0.236*** (0.0688)	−0.191*** (0.0717)	−0.224*** (0.0685)	−0.185*** (0.0711)
민다나오	0.148*** (0.0535)	0.180*** (0.0572)	0.143*** (0.0545)	0.179*** (0.0584)	0.153*** (0.0543)	0.184*** (0.0580)
표본 크기	628	618	628	618	628	61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로짓 추정 결과에 따른 변수별 한계효과.

[표 4-2]는 필리핀 유권자들의 자유당에 대한 지지 여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앞의 [표 4-1]과 마찬가지로 로짓 모형 추정 후 한계 효과를 계산하여 [표 4-2]를 도출했다. 자유당에 대한 지지 여부 역시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고, 지역주의적 투표행위에 의해서 크게 설명된다. 유권자 i가 속한 필리핀의 산업 s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자유당에 대한 지지를 보낼 확률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에서 비교우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중국과 교역 확대를 통해 통상 기조를 크게 바꾸려는 두테르테 후보가 위협적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통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자유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을 수 있다. 필리핀의 수출 산업은 주로 노동 집약적 제조업과 농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 교역 확대를 원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기존의 필리핀의 비교우위 지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다.

필리핀에 대한 추정 결과를 정리해보면 2016년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한 필리핀 민주당과, 정권을 내어주게 된 자유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 여부는 무역정책에 대한 유권자들 간의 의견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았다. 반면에 지역주의적 투표행위가 각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소로 드러났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필리핀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 $TradeBar_i$는 헥셔-올린 국제무역 모형이 예측한 바와 일관되게, 개개인의 인적 자본 형성 정도에 따라 설명되었다. 하지만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더 나아가 투표행위를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필리핀의 2016년 선거 정국에서 무역정책이 국내 요소 분포 및 국내 정치 상황에 의해 내생적으로 형성된 미시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논할 수 있다. 다만 비교우위 산업에서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자유당에 대한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았던 점은, 두테르테 후보의 대(對)중국 교역 확대 공약에 유권자들이 반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표 4-2. 필리핀 유권자들의 2016년 선거 정당 선택 결정요인(자유당)

구분	$Liberal_i$	$Liberal_i$	$Liberal_i$	$Liberal_i$	$Liberal_i$	$Liberal_i$
$TradeBar_i$	0.00911 (0.0145)	0.0105 (0.0146)	0.00793 (0.0145)	0.00992 (0.0146)	0.00834 (0.0146)	0.00990 (0.0146)
$Education_i$	−0.00182 (0.00754)	−0.000515 (0.00773)	−0.00361 (0.00759)	−0.00184 (0.00778)	−0.00150 (0.00755)	−0.000244 (0.00775)
$Personal\ Income_i$	−0.00000363 (0.00000251)		−0.00000295 (0.00000244)		−0.00000354 (0.00000250)	
$Household\ Income_i$		−0.00000195 (0.00000139)		−0.00000179 (0.00000138)		−0.00000190 (0.00000139)
Age_i	0.000119 (0.00101)	0.000121 (0.00100)	0.0000542 (0.00101)	0.0000544 (0.00100)	0.0000378 (0.00101)	0.0000599 (0.00101)
$Female_i$	−0.00560 (0.0295)	0.00655 (0.0286)	−0.00528 (0.0298)	0.00417 (0.0290)	−0.00138 (0.0301)	0.00961 (0.0291)
CA_{sk}			0.0975** (0.0467)	0.0851* (0.0475)		
CD_{sk}			−0.0222 (0.0422)	−0.0222 (0.0423)		
$Tradable_s$					0.0251 (0.0337)	0.0198 (0.0341)
루손	0.136*** (0.0417)	0.138*** (0.0433)	0.139*** (0.0405)	0.140*** (0.0422)	0.135*** (0.0422)	0.137*** (0.0439)
비사야스	0.173*** (0.0542)	0.178*** (0.0554)	0.187*** (0.0547)	0.190*** (0.0557)	0.169*** (0.0548)	0.174*** (0.0560)
민다나오	−0.0825** (0.0333)	−0.0818** (0.0349)	−0.0769** (0.0324)	−0.0767** (0.0340)	−0.0854** (0.0341)	−0.0842** (0.0356)
표본 크기	628	618	628	618	628	61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로짓 추정 결과에 따른 변수별 한계효과.

3. 태국

ISSP 2020은 태국의 응답자들이 2019년 총선거에서 어떤 정당들에 대해서 투표했는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태국의 응답자 1,498명 중에 848명이 이에 관한 답변을 거부했다. 태국은 절차적 민주화는 달성되었지만, 아직 권위주의적 요소가 정치 과정 곳곳에 남아 있다. 이에 태국의 응답자들은 본인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ISSP 조사팀에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태국 응답자들의 투표행위에 관한 이번 분석 결과는 표본 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를 내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음을 감안하고 해석해야 한다.8)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권 정당이자, 대표적인 중도우파 정당인 민주당과 2019년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중도 포퓰리즘 정당인 프아타이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로 설명되는지가 이번 장의 핵심 관심 사항이다. 통제 변수는 앞의 필리핀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가운데, 지역주의 투표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지역별 더미변수도 활용된다. ISSP 2020에 참여한 태국 응답자들은 방콕 지역(Bangkok), 북부 지방(North), 북동부 지방(Northeast), 중부 지방(Central), 남부 지방(South)의 5개 지역에 거주 중이다. 이에 방콕 지역을 기준 지역으로 고려하여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명 변수 집합에 포함했다. [표 4-3]과 [표 4-4]는 각각 민주당과 프아타이당에 대한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Democrat_i$과 $Pheu_i$는 각 정당 지지에 대한 유권자 단위의 더미변수들이다. 로짓 모형 추정 후에 도출한 각 독립 변수들의 한계 효과를 두 표에 기재했다. [표 4-3]의 4열

8) 선거 설문 데이터상에서의 표본 선택 편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실증적 표본 선택 모형(sample selection model)을 고려할 수 있다. Karakas, Kim, and Mitra(2021)가 스웨덴 선거 데이터에서의 표본 선택 편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이번 연구가 다루는 태국 유권자들에 대한 분석에도 표본 선택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 보고서에 해당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에서 CD_{sk}의 계수가 추정되지 않은 이유는 4열의 추정에 쓰이는 관측치는 모두 0의 CD_{sk} 값을 갖기 때문이다.

표 4-3. 태국 유권자들의 2019년 선거 정당 선택 결정요인(민주당)

구분	$Democrat_i$	$Democrat_i$	$Democrat_i$	$Democrat_i$	$Democrat_i$	$Democrat_i$
$TradeBar_i$	0.00623 (−0.0224)	−0.0026 (−0.0236)	0.00759 (−0.0225)	−0.00289 (−0.0239)	0.0063 (−0.0224)	−0.0025 (−0.0237)
$Education_i$	−0.00067 (−0.013)	0.0109 (−0.0139)	−0.00144 (−0.0131)	0.0115 (−0.0143)	−0.00085 (−0.0131)	0.0105 (−0.0141)
$Personal\ Income_i$	2.34E−06 (−1.6E−06)		0.00000288* (−1.6E−06)		2.35E−06 (−1.6E−06)	
$Household\ Income_i$		6.24E−07 (−4.5E−07)		6.06E−07 (−4.6E−07)		6.28E−07 (−4.5E−07)
Age_i	0.00143 (−0.00171)	0.00206 (−0.00185)	0.00124 (−0.00172)	0.00199 (−0.00189)	0.00141 (−0.00171)	0.00202 (−0.00186)
$Female_i$	−0.0605 (−0.0416)	−0.0445 (−0.0452)	−0.0616 (−0.0418)	−0.0449 (−0.0458)	−0.0609 (−0.0418)	−0.0449 (−0.0453)
CA_{sk}			0.00475 (−0.0474)	−0.00109 (−0.0521)		
CD_{sk}			−0.187 (−0.251)	− (−)		
$Tradable_s$					−0.00455 (−0.0461)	−0.00842 (−0.0507)
북부	−0.381** (−0.16)	−0.327* (−0.171)	−0.375** (−0.162)	−0.325* (−0.175)	−0.378** (−0.163)	−0.322* (−0.174)
북동부	−0.418*** (−0.146)	−0.409*** (−0.151)	−0.411*** (−0.147)	−0.411*** (−0.154)	−0.415*** (−0.148)	−0.404*** (−0.153)
중부	−0.413*** (−0.147)	−0.379** (−0.154)	−0.401*** (−0.147)	−0.374** (−0.156)	−0.411*** (−0.148)	−0.376** (−0.155)
남부	−0.0254 (−0.165)	−0.0139 (−0.184)	−0.0262 (−0.165)	−0.0177 (−0.188)	−0.0232 (−0.167)	−0.00843 (−0.187)
표본 크기	305	244	305	241	305	24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로짓 추정 결과에 따른 변수별 한계효과.

표 4-4. 태국 유권자들의 2019년 선거 정당 선택 결정요인(프아타이당)

구분	$Pheu_i$	$Pheu_i$	$Pheu_i$	$Pheu_i$	$Pheu_i$	$Pheu_i$
$TradeBar_i$	0.00608 (-0.0284)	0.0142 (-0.0312)	0.00402 (-0.0279)	0.0109 (-0.0302)	0.00588 (-0.0278)	0.0112 (-0.0302)
$Education_i$	-0.0199 (-0.0189)	-0.0255 (-0.0215)	-0.0301 (-0.0185)	-0.0406* (-0.0211)	-0.0299 (-0.0186)	-0.0400* (-0.0211)
$Personal\ Income_i$	-6.3E-07 (-2.2E-06)		-3.1E-07 (-2.2E-06)		1.08E-07 (-2.2E-06)	
$Household\ Income_i$		-7.6E-07 (-9.7E-07)		-5E-07 (-8.9E-07)		-5.2E-07 (-8.9E-07)
Age_i	-0.00127 (-0.00231)	-0.00123 (-0.00253)	-0.00252 (-0.00229)	-0.00286 (-0.00251)	-0.00261 (-0.00229)	-0.0029 (-0.00251)
$Female_i$	0.0908* (-0.0547)	0.0891 (-0.0611)	0.0955* (-0.0541)	0.106* (-0.0601)	0.0928* (-0.0541)	0.106* (-0.0601)
CA_{sk}			-0.205*** (-0.0587)	-0.227*** (-0.0616)		
CD_{sk}			-0.0384 (-0.199)	-0.102 (-0.284)		
$Tradable_s$					-0.194*** (-0.0574)	-0.222*** (-0.0609)
북부	0.269* (-0.138)	0.289** (-0.147)	0.319** (-0.131)	0.324** (-0.136)	0.321** (-0.13)	0.328** (-0.136)
북동부	0.363*** (-0.108)	0.362*** (-0.113)	0.408*** (-0.0981)	0.405*** (-0.0984)	0.406*** (-0.0975)	0.403*** (-0.0984)
중부	0.203* (-0.114)	0.246* (-0.128)	0.172* (-0.102)	0.216* (-0.112)	0.179* (-0.102)	0.219* (-0.112)
남부	-0.0171 (-0.113)	-0.0533 (-0.123)	-0.00485 (-0.103)	-0.0262 (-0.112)	-0.00468 (-0.102)	-0.0272 (-0.112)
표본 크기	305	244	305	244	305	24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로짓 추정 결과에 따른 변수별 한계효과.

앞서 필리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국 유권자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 $TradeBar_i$는 2019년 선거에서의 두 정당 선택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역주의 성향의 투표 행태는 강하게 나타난다. 유권자가 속한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유권자는 프아타이당을 지지할 확률이 낮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유권자가 속한

산업의 비교우위 여부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았다. 이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흔히 분류되곤 하는 프아타이당이 태국의 통상 기조를 많이 변화시킬 우려에 비교우위 산업 종사자들이 반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직 민주주의가 완전히 공고화되지 못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태국에서 통상 이슈는 정당 선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두 정당 간의 통상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한 핵심 요인이다. 2019년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응답자들의 평균 $TradeBar_i$ 값은 3.87이고, 프아타이당 지지자의 평균 $TradeBar_i$ 값은 3.59다. 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는 유권자들의 인적 자본 부존량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름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통상 이슈가 핵심 선거 의제로 부상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정치 상황 속에서 무역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은 지지 정당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적어도 2019년 선거 정국에서 태국의 무역정책은 국내 정치적 수요에 의해 내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4.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2020년 총선거에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정당을 지지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ISSP 2020에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전통적인 유력 정당인 노동당과 국민당에 대한 지지가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로 인해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여 뉴질랜드 정치가 통상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에 반응하고 있다는 단서가 발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Labour_i$는 유권자 i가 2020년 선거에서 노동당을 지지했다면 1을 갖는 더미변수이고, $National_i$도 국민당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형성된 더미변수다.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중도 좌파와 우파를 대표해온 정당들답게 정당 지지집단별 $TradeBar_i$ 평균값이 눈에 띄게 상이하

다. 노동당 지지자들의 평균 $TradeBar_i$ 값은 3.24이고, 국민당 지지자들의 평균 $TradeBar_i$ 값은 2.81이다. 즉 노동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 장벽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국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 장벽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 4-5]와 [표 4-6]은 각각 $Labour_i$와 $National_i$를 종속변수로 고려하여 로짓 확률 모형 추정의 한계 효과를 도출한 결과다. 앞의 분석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들과 함께, 응답자들의 주거지역 더미변수를 형성하여 활용했다. ISSP 2020은 뉴질랜드 응답자의 주거지역을 노스랜드(Northland), 오클랜드(Auckland), 와이카토(Waikato), 플렌티 지역만(Bay of Plenty Region), 호크스만 등(Hawke's Bay, Gisborne), 타라나키 등(Taranaki, Wanganui, Manawatu), 웰링턴(Wellington), 태즈먼 등(Tasman, Nelson, Marlborough, West), 칸텐버리(Cantenbury), 오타고 등(Otago, Southland)으로 구분했다. 이에 노스랜드 지역을 기준으로 9개의 더미변수를 구축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했다.

두 표 모두에서 $TradeBar_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두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설명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4-5]에서는 유권자 i가 높은 $TradeBar_i$ 값을 가질수록 노동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표 4-6]의 결과에서는 $TradeBar_i$의 값이 높을수록 국민당에 대해 해당 유권자가 투표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유권자가 뉴질랜드 경제 보호를 위해서 더 높은 무역 장벽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보낼 확률은 높은 반면에, 국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낼 확률은 낮다. 필리핀과 태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의 실증적 증거는 10개의 지역 중 2개 지역 정도에서만 발견된다. 유권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뉴질랜드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이라면, 해당 유권자는 2020년 선거에서 국민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국민당이 노동당에 비해 자유무역정책을 통한 비교우위 산업 장려에 더 유능할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추정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5.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2020년 선거 정당 선택 결정요인(노동당)						
구분	$Labour_i$	$Labour_i$	$Labour_i$	$Labour_i$	$Labour_i$	$Labour_i$
$TradeBar_i$	0.0414*** (−0.0159)	0.0362** (−0.0162)	0.0415*** (−0.0159)	0.0363** (−0.0162)	0.0414*** (−0.0159)	0.0362** (−0.0162)
$Education_i$	−0.0174* (−0.00953)	−0.00841 (−0.00962)	−0.0177* (−0.00956)	−0.00887 (−0.00965)	−0.0174* (−0.00953)	−0.00841 (−0.00962)
$Personal\ Income_i$	-0.000000872* (-4.5E-07)		-0.000000870* (-4.5E-07)		-0.000000874** (-4.5E-07)	
$Household\ Income_i$		-0.00000143*** (-3.8E-07)		-0.00000143*** (-3.7E-07)		-0.00000143*** (-3.8E-07)
Age_i	0.000429 (−0.00091)	−0.00033 (−0.00096)	0.000435 (−0.00091)	−0.00033 (−0.00096)	0.000436 (−0.00091)	−0.00033 (−0.00096)
$Female_i$	0.0988*** (−0.0341)	0.104*** (−0.0345)	0.0989*** (−0.0348)	0.102*** (−0.0353)	0.0997*** (−0.0347)	0.104*** (−0.0351)
CA_{sk}			−0.0188 (−0.0861)	−0.0461 (−0.0883)		
CD_{sk}			0.0138 (−0.0535)	0.00881 (−0.0534)		
$Tradable_s$					0.0067 (−0.0461)	0.000175 (−0.0465)
오클랜드	0.0198 (−0.0861)	0.00439 (−0.0874)	0.017 (−0.0871)	−0.00246 (−0.0884)	0.0207 (−0.0863)	0.00441 (−0.0876)
와이카토	0.115 (−0.104)	0.096 (−0.106)	0.113 (−0.105)	0.0914 (−0.106)	0.116 (−0.105)	0.096 (−0.106)
플렌티만	0.0715 (−0.119)	0.0539 (−0.12)	0.069 (−0.119)	0.0484 (−0.121)	0.072 (−0.119)	0.0539 (−0.12)
호크스 등	0.208* (−0.121)	0.165 (−0.126)	0.205* (−0.122)	0.159 (−0.127)	0.208* (−0.121)	0.165 (−0.126)
타라나키 등	−0.0279 (−0.107)	−0.0548 (−0.109)	−0.0292 (−0.108)	−0.0588 (−0.109)	−0.027 (−0.107)	−0.0548 (−0.109)
웰링턴	0.112 (−0.0977)	0.111 (−0.0989)	0.109 (−0.0989)	0.103 (−0.1)	0.113 (−0.098)	0.111 (−0.0991)
태즈먼 등	0.0778 (−0.124)	0.0767 (−0.124)	0.074 (−0.125)	0.0697 (−0.125)	0.078 (−0.124)	0.0767 (−0.124)
칸텐버리	0.0531 (−0.0978)	0.0421 (−0.0996)	0.0511 (−0.0984)	0.0364 (−0.1)	0.0539 (−0.098)	0.0421 (−0.0998)
오타고 등	−0.0018 (−0.114)	−0.0191 (−0.116)	−0.00276 (−0.114)	−0.0217 (−0.116)	−0.00126 (−0.114)	−0.0191 (−0.116)
표본 크기	818	784	818	784	818	78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로짓 추정 결과에 따른 변수별 한계효과.

표 4-6.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2020년 선거 정당 선택 결정요인(국민당)

구분	$National_i$	$National_i$	$National_i$	$National_i$	$National_i$	$National_i$
$TradeBar_i$	−0.0606*** (−0.0138)	−0.0532*** (−0.014)	−0.0611*** (−0.0138)	−0.0539*** (−0.014)	−0.0608*** (−0.0138)	−0.0534*** (−0.0141)
$Education_i$	−0.00335 (−0.0083)	−0.00963 (−0.0083)	−0.00223 (−0.00832)	−0.0085 (−0.00832)	−0.00307 (−0.00831)	−0.0094 (−0.00831)
$Personal\ Income_i$	0.000000649* (−3.8E−07)		0.000000625* (−3.8E−07)		0.000000636* (−3.8E−07)	
$Household\ Income_i$		0.00000116*** (−3.4E−07)		0.00000116*** (−3.4E−07)		0.00000117*** (−3.4E−07)
Age_i	0.00323*** (−0.0008)	0.00375*** (−0.00085)	0.00328*** (−0.0008)	0.00380*** (−0.00085)	0.00329*** (−0.0008)	0.00382*** (−0.00085)
$Female_i$	−0.00328 (−0.0303)	−0.00768 (−0.0307)	0.0058 (−0.031)	0.00369 (−0.0315)	0.0033 (−0.0309)	0.000481 (−0.0313)
CA_{sk}			0.116* (−0.067)	0.134** (−0.0684)		
CD_{sk}			0.0167 (−0.0463)	0.0212 (−0.0463)		
$Tradable_s$					0.0451 (−0.0387)	0.0544 (−0.039)
오클랜드	−0.0331 (−0.0785)	−0.0197 (−0.0793)	−0.0135 (−0.0774)	0.00269 (−0.0777)	−0.0267 (−0.0779)	−0.0125 (−0.0784)
와이카토	−0.11 (−0.092)	−0.0931 (−0.093)	−0.0982 (−0.0899)	−0.0774 (−0.0909)	−0.105 (−0.0912)	−0.0871 (−0.0922)
플렌티만	−0.0407 (−0.107)	−0.0217 (−0.108)	−0.027 (−0.105)	−0.00631 (−0.106)	−0.0365 (−0.106)	−0.0171 (−0.107)
호크스 등	−0.179* (−0.0978)	−0.15 (−0.102)	−0.162* (−0.0968)	−0.13 (−0.101)	−0.173* (−0.0973)	−0.143 (−0.102)
타라나키 등	0.0435 (−0.101)	0.0628 (−0.102)	0.0573 (−0.0992)	0.0781 (−0.0997)	0.0506 (−0.1)	0.0707 (−0.101)
웰링턴	−0.172** (−0.0836)	−0.161* (−0.0842)	−0.151* (−0.0831)	−0.136 (−0.0833)	−0.166** (−0.0831)	−0.153* (−0.0835)
태즈먼 등	−0.168* (−0.102)	−0.159 (−0.101)	−0.154 (−0.1)	−0.142 (−0.0991)	−0.167* (−0.0999)	−0.158 (−0.0991)
칸텐버리	−0.0697 (−0.0879)	−0.058 (−0.0889)	−0.0552 (−0.0864)	−0.0404 (−0.0871)	−0.0649 (−0.0872)	−0.0525 (−0.0881)
오타고 등	−0.0944 (−0.101)	−0.0859 (−0.103)	−0.0855 (−0.0981)	−0.0763 (−0.0995)	−0.0904 (−0.0997)	−0.0819 (−0.102)
표본 크기	818	784	818	784	818	78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로짓 추정 결과에 따른 변수별 한계효과.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는 앞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개인의 인적 자본 형성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개인별로 제각기 다른 무역 장벽에 대한 태도는 실제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와도 관련이 있음을 이번 장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 총선거에서 통상 관련 이슈는 정당의 득표율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논점이고, 뉴질랜드의 집권 세력 및 유력 정당들은 집권을 위해 유권자들의 통상 관련 수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뉴질랜드에서는 무역정책이 국내 요소 분포 및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내생적으로 형성될 여지가 매우 클 수 있다.

5. 호주

ISSP 2020이 다루지 않는 호주의 경우, ISSP가 가장 최근에 조사를 실시한 연도는 2003년이다. ISSP 2003은 최근 총선에서의 선택 정당 대신에 당시 유권자들의 최고 선호 정당에 관해 응답자들에게 질문했다. 전통적 유력 정당인 노동당과 자유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와 좌성향 환경 정당인 녹색당, 그리고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되는 일국당에 대한 지지가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이번 장에서 분석한다. ISSP 2003에서 노동당 지지자들의 평균 $TradeBar_i$ 값은 3.75다. 자유당 지지자들의 평균 $TradeBar_i$ 값도 거의 비슷한 3.71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반면 녹색당과 일국당은 각각 3.44와 4.38에 형성되어 있어 유력 양당들에 비해 확실한 정책 선명성을 기반으로 지지자 집단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7]과 [표 4-8]은 호주의 4개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구축한 더미변수들을 종속변수로 고려한 분석 결과다. 자유당, 노동당, 녹색당, 일국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각각 $AuLib_i$, $AuLab_i$,

$Greens_i$, One_i로 명명했다. ISSP 2003은 호주 응답자들의 거주지를 다음과 같이 8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 태즈메이니아(Tasmania), 수도 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북부 지역(Northern Territory)이 이에 해당한다. 뉴사우스웨일스를 기준 지역으로 고려하여 7개의 더미변수를 구축한 후 설명변수로 도입했다. 유권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의 비교우위 여부와 교역재·비교역재 여부를 나타내는 CA_{sk}, CD_{sk}, $Tradable_s$는 ISSP 2020의 산업분류 코드인 ISCO 08을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ISCO 88을 활용한 ISSP 2003과는 상응하지 않는다. 이에 관련한 통제변수는 [표 4-7]과 [표 4-8]에는 활용되지 못했다. [표 4-7]의 첫 두 열은 자유당 지지 여부에 관한 분석이고, 나머지 두 열은 노동당에 대한 지지 여부에 관한 분석이다. [표 4-8]의 첫 두 열은 녹색당에 대한 지지 여부 결정요인들을 분석했고, 나머지 두 열은 일국당에 대한 지지 여부 결정요인들을 분석했다. 앞의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분포 기반의 비선형 확률 모형 추정 후, 한계 효과를 모든 설명 변수들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다. [표 4-8]에서 다루는 두 정당은 [표 4-7]의 유력 양당에 비해 지지 기반이 작기 때문에 ISSP 2003에도 지지자 표본 집단이 크지 못하다. 이에 지지자 표본 집단이 모든 8개 지역에 걸쳐서 분포되지 않은 경우, 결측치가 있는 지역의 더미변수들에 대해서는 한계 효과의 계수가 추정될 수 없다.

[표 4-7]에 따르면 $TradeBar_i$는 유력 양당(자유당, 노동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표 4-8]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1열을 제외한 3개의 열에서 $TradeBar_i$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한계 효과를 가진다. 개별 유권자의 $TradeBar_i$ 값이 클수록 녹색당을 지지할 확률은 낮아지지만, 일국당을 지지할 확률은 증가한다. 다시 말해 유권자가 선호하는 무역 장벽이 높을수록 일국당에 대한 지지 확률은 증가하지만, 녹색당에 대한 지지 확률은 오히려 감소한다.

표 4-7. 호주 유권자들의 2003년 정당 선호 결정요인(자유당, 노동당)

구분	$AuLib_i$	$AuLib_i$	$AuLab_i$	$AuLab_i$
$TradeBar_i$	−0.0103 (−0.0128)	0.00187 (−0.0129)	−0.00263 (−0.0132)	−0.0106 (−0.0132)
$Education_i$	0.0111 (−0.00785)	0.0118 (−0.00785)	−0.0235*** (−0.00792)	−0.0247*** (−0.00794)
$Personal\ Income_i$	0.00000204*** (−5.2E−07)		−0.00000117** (−5.5E−07)	
$Household\ Income_i$		0.00000151*** (−3.2E−07)		−0.000000953*** (−3.4E−07)
Age_i	0.00385*** (−0.00088)	0.00435*** (−0.00092)	−0.00217** (−0.0009)	−0.00239** −0.00094
$Female_i$	0.0336 (−0.0265)	0.00639 (−0.0256)	−0.0438 (−0.027)	−0.0181 (−0.0263)
빅토리아	0.0373 (−0.0324)	0.0336 (−0.0325)	−0.0204 (−0.0334)	−0.0276 (−0.0336)
퀸즐랜드	0.0186 (−0.0388)	−0.00366 (−0.0385)	−0.0645 (−0.0397)	−0.053 (−0.04)
남부 호주	0.0778* (−0.047)	0.0769 (−0.0471)	−0.0215 (−0.0475)	−0.0271 (−0.0476)
서부 호주	0.105** (−0.0481)	0.117** (−0.0489)	−0.106** (−0.0475)	−0.116** (−0.0481)
태즈메이니아	0.168** (−0.0816)	0.164** (−0.0816)	−0.102 (−0.0797)	−0.11 (−0.0796)
수도 지역	−0.170** (−0.0707)	−0.198*** (−0.067)	−0.0147 (−0.0915)	0.0035 (−0.0931)
북부 지역	−0.054 (−0.185)	−0.102 (−0.162)	0.202 (−0.191)	0.108 (−0.185)
표본 크기	1465	1446	1465	144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로짓 추정 결과에 따른 변수별 한계효과.

호주의 정치에서 거대 양당은 중위 투표자 집단의 지지를 선점하기 위해 중도적 어젠다에 대한 경쟁적 수렴을 보이는 반면에, 군소 정당들은 선명성이 강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일국당은 21세기 들어 서방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많이 관찰되기 시작한 우파 포퓰리

즘 정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당으로, 통상 및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자국민 중심주의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무역 및 통상 이슈에서 선명성이 약한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에서 $TradeBar_i$의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점과, [표 4-8]의 두 군소 정당에 대한 지지에서 $TradeBar_i$의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은 호주의 정치 지형을 잘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4-8. 호주 유권자들의 2003년 정당 선호 결정요인(녹색당, 일국당)

구분	$Green_i$	$Green_i$	One_i	One_i
$TradeBar_i$	-0.00955 (-0.00632)	-0.0115* (-0.00625)	0.0205*** (-0.00645)	0.0189*** (-0.00625)
$Education_i$	0.0177*** (-0.00502)	0.0169*** (-0.00494)	-0.00420* (-0.00254)	-0.00374 (-0.00253)
$Personal\ Income_i$	-3.8E-07 (-2.7E-07)		-1.2E-07 (-2E-07)	
$Household\ Income_i$		-0.000000303* (-1.6E-07)		-1.6E-07 (-1.4E-07)
Age_i	-0.000955** (-0.00046)	-0.00110** (-0.00047)	-0.00018 (-0.0003)	-0.0003 (-0.00031)
$Female_i$	0.0232* (-0.0139)	0.0189 (-0.0132)	-0.0261*** (-0.00979)	-0.0269*** (-0.00973)
빅토리아	0.0173 (-0.0171)	0.0290* (-0.0171)	-0.0173** (-0.00867)	-0.0177** (-0.00883)
퀸즐랜드	-0.00739 (-0.0185)	-5.5E-05 (-0.0181)	0.0259 (-0.0162)	0.027 (-0.0166)
남부 호주	-0.0237 (-0.0197)	-0.0172 (-0.019)	-0.0129 (-0.0122)	-0.0139 (-0.0121)
서부 호주	0.0119 (-0.0246)	0.0145 (-0.0241)	0.0254 (-0.0216)	0.0166 (-0.0203)
태즈메이니아	0.0197 (-0.0455)	0.0284 (-0.0459)	- (-)	- (-)
수도 지역	0.0807 (-0.0594)	0.097 (-0.0623)	- (-)	- (-)
북부 지역	- (-)	- (-)	- (-)	- (-)
표본 크기	1459	1439	1388	136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ISSP 설문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로짓 추정 결과에 따른 변수별 한계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연구의 실증 분석을 통해 동남아·대양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가 모국이 직면한 비교우위 상황과 국내 요소 분포에 의해 설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각국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을 선택할 때,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태도가 지지 정당 결정과 연관이 있는지 분석하여 무역정책이 국내 수요에 의해 내생적으로 형성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서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요가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다.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수요보다는 지역주의적 투표행위가 주도적인 정당 투표 결정의 요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은 2020년 선거에서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가 유력 양당에 대한 지지와 연관이 깊은 경향이 있었다. 유권자가 선호하는 무역 장벽이 높을수록 국민당에 대한 투표 가능성은 낮았고, 노동당에 대한 투표 가능성은 높았다. 호주의 경우 유력 양당인 노동당과 자유당에 대한 지지 여부는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에 의해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책적 선명성이 유력 양당에 비해 더 짙은 녹색당과 일국당에 대한 지지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무역 장벽의 높이에 의해 설명되었다.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일국당에 대한 지지 가능성은 높아진 반면에, 녹색당에 대한 지지 가능성은 낮아졌다.

흥미로운 부분은 유권자가 종사하는 국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인지 여부가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는 점이다. 필리핀에서는 유권자의 종사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 자유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았다.

태국에서는 유권자가 비교우위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프아타이당에 대한 지지 확률이 낮아졌으며, 뉴질랜드에서는 비교우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국민당에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경제학적 이론, 특히 헥셔-올린 요소부존 접근법과 특정 요소 접근법에 관련하여 파생되었던 이론적 논의들을 기반으로 실증 분석 모형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급부상 중인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통상 기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적 조치의 국내 정치경제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의 양적 분석과 함께 각국의 상황을 반영한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각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조치들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정책 입안까지의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추적한다면, 이번 연구에서 밝힌 내생적 무역정책 형성의 미시적 증거가 통상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명시적으로 관찰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Autor, D., D. Dorn, G. Hanson, and K. Majlesi. 2020. "Importing Political Polarization?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Rising Trade Exposure." *American Economic Review*, 110(10), pp. 3139-3183.

Balassa, B. 1965.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33(2), pp. 99-123.

Balistreri, E. J. 1997. "The performance of the Heckscher-Ohlin-Vanek model in predicting endogenous policy forces at the individual level."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0(1), pp. 1-17.

Ballard-Rosa, C., A. Jensen, and K. Scheve. 2022. "Economic decline, social identity, and authoritarian value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6(1), p. sqab027.

Barone, G. and H. Kreuter. 2021. "Low-wage import competition and populist backlash: The case of Ital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7, p. 101970.

Beaulieu, E. 2002. "Factor or industry cleavages in trade polic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tolper Samuelson theorem." *Economics and Politics*, 14(2), pp. 99-131.

Cerrato, A., F. M. Ferrara, and F. Ruggieri. 2018. "Why does import competition favor Republicans?" SSRN 3147169.

Che, Y., Y. Lu, J. R. Pierce, P. K. Schott, and Z. Tao. 2022. "Did trade liberalization with China influence US elec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39, p. 103652.

Choi, J., I. Kuziemko, E. Washington, and G. Wright. 2020. "Local employment and political effects of trade deals: evidence from NAFTA." Unpublished manuscript, Princeton Univ., Princeton, NJ.

Colantone, I. and P. Stanig. 2018a. "Global competition and Brexi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2(2), pp. 201-218.

______. 2018b.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the 'Cultural Backlash':

Globalization and Attitudes in Western Europe." BAFFI CAREFIN Centre Research Paper(2018-91).
______. 2018c. "The trade origins of economic nationalism: Import competition and voting behavior in Western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2(4), pp. 936-953.
Dippel, C., R. Gold, S. Heblich, and R. Pinto. 2017. "Instrumental variables and causal mechanisms: Unpacking the effect of trade on workers and voters(No. w2320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Dutt, P. and D. Mitra. 2002. "Endogenous trade policy through majority vot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8(1), pp. 107-133.
______. 2005. "Political ideology and endogenous trade policy: an empirical investig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1), pp. 59-72.
Findlay, R. and S. Wellisz. 1982. "Endogenous tariffs,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restrictions, and welfare." *Import competition and response*, pp. 223-24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rossman, G.M. and E. Helpman. 1994. "Protection for sal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pp. 833-850.
______. 2021. "Identity politics and trade polic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8(3), pp. 1101-1126.
Hillman, A. L. 1989. "The political economy of protection." Taylor & Francis.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 1995. "National Identity I." ZA No. 2880. https://www.gesis.org/en/issp/modules/issp-modules-by-topic/national-identity/1995(검색일: 2023. 2. 15).
______. 2003. "National Identity II." ZA No. 3910. https://www.gesis.org/en/issp/modules/issp-modules-by-topic/national-identity/2003(검색일: 2023. 2. 15).
______. 2013. "National Identity III." ZA No. 5950. https://www.gesis.org/en/issp/modules/issp-modules-by-topic/national-identity/2013(검색일: 2023. 2. 15).
______. 2020. "Environment IV." ZA No. 7650. https://www.gesis.org/en/issp/modules/issp-modules-by-topic/environment/2020(검색일: 2023. 2. 15).
Jones, W. R. 1971. "A three factor model in theory, trade, and history."

Trade, balance of payments and growth, pp. 3-21.
Karakas, L. D., N. S. Kim, and D. Mitra. 2021. "Attitudes towards globalization barriers and implications for voting: Evidence from Swede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90, pp. 851-877.
Magee, S. P., W. A. Brock, and L. Young. 1989. "Black hole tariffs and endogenous policy theory: Political economy in general equilibri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lgouyres, C. 2017. "Trade shocks and far-right voting: Evidence from French presidential elections." Robert Schuman Centre for Advanced Studies Research Paper No. RSCAS, 21.
Mayda, A. M. and D. Rodrik. 2005. "Why are some people (and countries) more protectionist than others?" *European Economic Review*, 49(6), pp. 1393-1430.
Mayer, W. 1974. "Short-run and long-run equilibrium for a small open econom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5), pp. 955-967.
______. 1984. "Endogenous tariff 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4(5), pp. 970-985.
Pástor, Ľ. and P. Veronesi. 2021. "Inequality aversion, populism, and the backlash against globalization." *The Journal of Finance*, 76(6), pp. 2857-2906.
Rodrik, D. 1995.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3, pp. 1457-1494.
______. 2021. "Why does globalization fuel populism? Economics, culture, and the rise of right-wing populism." *Annual Review of Economics*, 13, pp. 133-170.
Rommel, T. and S. Walter. 2018.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offshoring: how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shapes party preferen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1(5), pp. 621-658.
Samuelson, P. A. 1971. "Ohlin was right." *The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73(4), pp. 365-384.
Scheve, K. F. and M. J. Slaughter. 2001. "What determines individual trade-policy preferenc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4(2), pp. 267-292.

부록 SITC Rev.3과 ISCO08 간의 호응

제3장의 3절은 유권자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가 유권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비교우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실증적인 검정을 실시한다. 이는 특정요소 접근법에 기초한 실증 분석 방법으로서, ISSP 2020년 설문의 직업 코드(ISCO08)와 국제 무역 상품 코드 간의 호응이 필요하다. Mayda and Rodrik(2005)의 방법에 기반하여, 2020년 설문을 기반으로 UN Comtrade의 SITC Rev.3 상품 코드와 호응시킨 결과가 [부록 표 1]과 같다. 직업 코드와 상품 코드가 정확히 상응하기 어려우므로, Mayda and Rodrik (2005)의 코드 호응 결과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상품 코드와 복수의 직업 코드가 서로 교차하며 호응한다.

부록 표 1. SITC Rev.3과 ISCO08 간의 호응

SITC Rev.3	ISCO08	ISCO08 직업명 (30글자 초과 부분 생략)
0	6130	Mixed crop and animal producers
0	6330	Subsistence mixed crop and livest...
0	9213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 lab...
0, 11	7515	Food and beverage tasters and gra...
0, 24	8341	Mobile farm and forestry plant op...
00, 01, 02	6320	Subsistence livestock farmers
00, 01, 02	9212	Livestock farm labourers
00, 01, 02, 03	6121	Livestock and dairy producers
00, 01, 02, 03	6122	Poultry producers
00, 01, 02, 03	6123	Apiarists and sericulturists
00, 01, 02, 03	6129	Animal producers not elsewhere cl...
01, 03	7511	Butchers, fishmongers and related...
02	7513	Dairy-products makers

부록 표 1. 계속

SITC Rev.3	ISCO08	ISCO08 직업명 (30글자 초과 부분 생략)
03	1312	Aquaculture and fisheries product...
03	6221	Aquaculture workers
03	6222	Inland and coastal waters fishery...
03	6340	Subsistence fishers, hunters, tra...
03	9216	Fishery and aquaculture labourers
03, 04, 05, 06, 07, 24	2132	Farming, forestry and fisheries a...
04	7512	Bakers, pastry-cooks and confecti...
04, 05, 06, 07	6111	Field crop and vegetable growers
04, 05, 06, 07	6112	Tree and shrub crop growers
04, 05, 06, 07	6113	Gardeners, horticultural and nurs...
04, 05, 06, 07	6114	Mixed crop growers
04, 05, 06, 07	6310	Subsistence crop farmers
04, 05, 06, 07	9211	Crop farm labourers
04, 05, 06, 07, 24	1311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
04, 05, 06, 07, 721, 722	3142	Agricultural technicians
05	7514	Fruit, vegetable and related pres...
23	8141	Rubber products machine operators
24	3143	Forestry technicians
24	6210	Forestry and related workers
24	7521	Wood treaters
24	9214	Garden and horticultural labourer
24	9215	Forestry labourers
24, 63, 82	7317	Handicraft workers in wood, baske...
24, 63, 82	7523	Woodworking-machine tool setters
24, 63, 82	8172	Wood processing plant operators
25	8171	Pulp and papermaking plant operat...
25, 64	8143	Paper products machine operators
26, 61, 84	7318	Handicraft workers in textile, le...
26, 61, 84	7531	Tailors, dressmakers, furriers an...
26, 61, 84	7532	Garment and related pattern-maker
26, 61, 84	7533	Sewing, embroidery and related wo...
26, 61, 84	7534	Upholsterers and related workers
26, 61, 84	7536	Shoemakers and related workers
26, 61, 84	8151	Fibre preparing, spinning and win...
26, 61, 84	8152	Weaving and knitting machine oper...
26, 61, 84	8153	Sewing machine operators
26, 61, 84	8154	Bleaching, dyeing and fabric clea...
897	7313	Jewellery and precious-metal work...
898	7312	Musical instrument makers and tun

부록 표 1. 계속

SITC Rev.3	ISCO08	ISCO08 직업명 (30글자 초과 부분 생략)
26, 61, 84	8155	Fur and leather preparing machine...
26, 61, 84	8156	Shoemaking and related machine op
26, 61, 84	8157	Laundry machine operators
26, 61, 84	8159	Textile, fur and leather products...
27, 28, 32	1322	Mining managers
27, 28, 32	2146	Mining engineers, metallurgists a...
27, 28, 32	3117	Mining and metallurgical technici...
27, 28, 32	3121	Mining supervisors
27, 28, 32	3122	Manufacturing supervisors
27, 28, 32	3123	Construction supervisors
27, 28, 32	8111	Miners and quarriers
27, 28, 32	8112	Mineral and stone processing plan...
27, 28, 32	8113	Well drillers and borers and rela...
27, 28, 32	8114	Cement, stone and other mineral p...
27, 28, 32	9311	Mining and quarrying labourers
33, 34	3134	Petroleum and natural gas refinin...
5	2113	Chemists
5	2145	Chemical engineers
5	3116	Chemical engineering technicians
5	3133	Chemical processing plant control...
5	8131	Chemical products plant and machi...
5, 6, 7, 8	1321	Manufacturing managers
5, 6, 7, 8	3111	Chemical and physical science tec...
5, 6, 7, 8	9321	Hand packers
5, 6, 7, 8	9329	Manufacturing labourers not elsew...
54	2262	Pharmacists
54	3211	Medical imaging and therapeutic e...
54	3212	Medical and pathology laboratory...
54	3213	Pharmaceutical technicians and as...
54	3214	Medical and dental prosthetic tec...
57, 58	8142	Plastic products machine operator
6, 7, 8	2141	Industrial and production enginee...
6, 7, 8	2149	Engineering professionals not els...
63, 82	7522	Cabinet-makers and related worker
664, 665	7315	Glass makers, cutters, grinders a...
666	7314	Potters and related workers
67, 68, 69, 73	3135	Metal production process controll...

부록 표 1. 계속

SITC Rev.3	ISCO08	ISCO08 직업명 (30글자 초과 부분 생략)
67, 68, 69, 73	7211	Metal moulders and coremakers
67, 68, 69, 73	7212	Welders and flamecutters
67, 68, 69, 73	7213	Sheet-metal workers
67, 68, 69, 73	7214	Structural-metal preparers and er...
67, 68, 69, 73	7215	Riggers and cable splicers
67, 68, 69, 73	7221	Blacksmiths, hammersmiths and for...
67, 68, 69, 73	7222	Toolmakers and related workers
67, 68, 69, 73	7223	Metal working machine tool setter
67, 68, 69, 73	7224	Metal polishers, wheel grinders a...
67, 68, 69, 73	8121	Metal processing plant operators
67, 68, 69, 73	8122	Metal finishing, plating and coat...
7	2144	Mechanical engineers
7	3115	Mechanical engineering technician
7	7233	Agricultural and industrial machi...
7	8211	Mechanical machinery assemblers
71	3131	Power production plant operators
714, 741	8182	Steam engine and boiler operators
741, 742	3132	Incinerator and water treatment p...
75, 76	133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
75, 76	2153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75, 76	2511	Systems analysts
75, 76	2512	Software developers
75, 76	2513	Web and multimedia developers
75, 76	2514	Applications programmers
75, 76	2519	Software and applications develop...
75, 76	2520	Database and network professional...
75, 76	2521	Database designers and administra...
75, 76	2522	Systems administrators
75, 76	2523	Computer network professionals
75, 76	2529	Database and network professional...
75, 76	351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
75, 76	351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
75, 76	3513	Computer network and systems tech...
75, 76	3514	Web technicians
75, 76	3520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
75, 76	3521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tec...
75, 76	3522	Telecommunications engineering te...

부록 표 1. 계속

SITC Rev.3	ISCO08	ISCO08 직업명 (30글자 초과 부분 생략)
75, 76	742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
75, 76, 77	3114	Electronics engineering technicia...
77	2151	Electrical engineers
77	2152	Electronics engineers
77	3113	Electrical engineering technician...
77	7411	Building and related electricians
77	7412	Electrical mechanics and fitters
77	7413	Electrical line installers and re...
77	7421	Electronics mechanics and service...
77	8212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
78	7231	Motor vehicle mechanics and repai...
792	3153	Aircraft pilots and related assoc...
792	3154	Air traffic controllers
792	7232	Aircraft engine mechanics and rep...
793	3151	Ships' engineers
793	3152	Ships' deck officers and pilots
87	7311	Precision-instrument makers and r...
88	8132	Photographic products machine ope...
882, 883	2654	Film, stage and related directors
892	2641	Authors and related writers
892	2642	Journalists
892	2643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oth...
892	4212	Bookmakers, croupiers and related...
892	7321	Pre-press technicians
892	7322	Printers
892	7323	Print finishing and binding worke...
892, 896	7316	Sign writers, decorative painters
896	2651	Visual artists
896	2659	Creative and performing artists n...
896	3431	Photographers
896	3432	Interior designers and decorators
896	3433	Gallery, museum and library techn...
896	3435	Other artistic and cultural assoc...
897	7313	Jewellery and precious-metal work...
898	7312	Musical instrument makers and tun

자료: 저자의 SITC Rev.3과 ISCO08 호응 결과.

Executive Summary

Voters'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m in Southeast Asia and Oceania: Evidence from the Philippines, Thailand, Australia, and New Zealand

Nam Seok Kim

This research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voters' attitudes towards protectionism in four Southeast Asian and Oceania countries (the Philippines, Thailand,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discusses whether voters'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m are related to their voting behavior. This study utilizes the endogenous trade policy formation theory in international economics to understand how voters'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m are formed. Furthermore, by examining whether voters' political party support can be explained by their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m, this study confirms that changes in each country's trade policy orientation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ir domestic political-economic backgroun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Voters in relatively labor-abundant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prefer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s their human capital attainment increases. In contrast, voters in relatively capital-abundant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New Zealand prefer free trade policies as their human capital attainment increases. These findings align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of the Heckscher-Ohlin model-based factor endowment approach. However, since the factor endowment approach is based on

the long-run assumption of free labor mobility across industries, it may deviate significantly from reality.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e analysis introduces a specific-factor approach that considers rigidities in the labor movement between industries to test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protectionism between voters in comparative advantage industries and voters in comparative disadvantage indust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theoretical predictions of the specific-factor approach did not have empirical validity for the voters in the four countries.

Determining whether individual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voting behavior requires a separate analysis. Analyzing the survey data on the party choices of each voter in general elec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ir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m do not explain voters' voting behavior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In contrast, voters' voting behavior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is significantly explained by their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m. Australian voters who prefer higher trade barrier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right-wing populist party, the One Nation Party, while New Zealand voters who prefer higher trade barrier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Labour Party.

From the above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trade policy orientation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tend to reflect domestic political-economic backgrounds to a significant extent, while this is not the case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As the estimat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voting pattern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are strongly influenced by regionalist tendencies. This study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need to refine trade negotiation strategies by taking into account the domestic political-economic situations of these four major trading partners of South Korea.

〈책임〉

김남석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학사 및 석사)
미국 Syracus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ns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Alternative Representations of Technological Change”(공저, *Panel Data Econometrics*, 885-929, 2019)

“Attitudes Towards Globalization Barriers and Implications for Voting: Evidence from Sweden”(공저,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190, 2021) 외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2-14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강민지

22-15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 정 철·김봉근·정민철

22-16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김은미·이성희

22-17　국제분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 박영석

22-1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 김윤정·임유진

■ 2021년

21-01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 이현진·이철원·윤형준

21-02　디지털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동향과 시사점 / 박지현

21-03　미·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중 경제협력 방향 / 양평섭·최지원

21-04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최유정·한하린

21-05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 조동희·오태현·이현진

21-0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 박혜리·박지현

21-07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박순찬

21-08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 서진교

21-09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 조동희·장영욱·이현진·윤형준

21-10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방안 / 이재호

■ 2020년

20-01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 김홍원·김주혜

20-02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 정성춘

20-03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 박민숙·이효진

20-04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 이규엽·김현수

20-05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 이규엽·엄준현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table>
<tr><th rowspan="2">회원종류</th><th rowspan="2">배포자료</th><th colspan="3">연간회비</th></tr>
<tr><td>기관회원</td><td>개인회원</td><td>연구자회원*</td></tr>
<tr><td>S</td><td>외부배포 발간물 일체</td><td>30만원</td><td>20만원</td><td>10만원</td></tr>
<tr><td>A</td><td>East Asian
Economic Review</td><td colspan="2">8만원</td><td>4만원</td></tr>
</table>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References 23-04

Voters' Attitudes towards Protectionism in Southeast Asia and Oceania: Evidence from the Philippines, Thailand, Australia, and New Zealand

Nam Seok Kim

본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한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제경제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내생적 무역정책 형성이론의 미시적 기초를 활용한다. 나아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가 그들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설명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가 정치경제적 배경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교역 상대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통상교섭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ISBN 978-89-322-2504-3
978-89-322-2064-2(세트)

정가 5,000원